

발간 등록 번호

11-B190031-000197-08

Shaping the Future with EDCF

한국의 개발협력

Journal of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2021 NO. 2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 및 시사점
포스트 코로나 보건 ODA 현황 및 시사점
해외어항 개발협력사업 추진 방향 및 시사점
방글라데시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에티오피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한국의 개발협력

Journal of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2021년 제2호

한국의 개발협력

발행 : 2022년 1월

발행인 : 방 문 규

발행처 : 한국수출입은행

편집인 : 엄 성 용

주소 :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전화 : 02-3779-6114(대표)

팩스 : 02-784-1030(대표)

홈페이지 : www.edcfkorea.go.kr

본 발간물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표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국제개발협력 동향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 및 시사점..... 3

II. 분야별, 국가별 개발협력 논의동향

포스트 코로나 보건 ODA 현황 및 시사점..... 31

해외어항 개발협력사업 추진 방향 및 시사점..... 65

III. 개발협력대상국 분석

방글라데시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79

에티오피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115

EDCF

I. 국제개발협력 동향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 및 시사점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 및 시사점¹⁾

목 차

- I. 머릿말
 - II. 기후변화 대응 체계
 - 1. 기후위험 관리체계
 - 2. 기후사업 성과관리 체계
 - III. 주요 공여기관 현황
 - 1. 일본 JICA
 - 2. 독일 KfW
 - 3. 미국 USAID
 - IV. 맺음말
- 참고문헌

1) 본 원고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책임연구원: 이옥수 이사)이 수행한 'EDCF 기후변화영향 대응체계' 연구용역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힘.

1. 머리말

기후변화 대응은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선진 공여기관을 주축으로 기후금융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개도국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기후 주류화(Climate mainstreaming)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녹색회복(Green Recovery)'이 키워드로 대두되는 등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 기후변화 문제해결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OECD DAC 차원의 활동을 살펴보면, 2019년 11월 '개발 협력 및 기후행동의 통합(Aligning Development Co-operation and Climate Action)'을 통해 파리협정과 개발협력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하였고, 2021년 3월에는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한 개발협력 지침(Strengthening Climate Resilience: Guidance for Governments and Development Co-operation)'을 통해 기후회복력 강화의 핵심원칙(수원국의 주인의식, 포용적 접근, 환경 및 사회적 지속 가능성), 이행방안, 선행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였다. 최근에는 제26차 당사국총회의(COP26)에 맞추어 파리협정과 일관성 있는 ODA 지원을 공약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21.10.27.자)하였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추세에 발맞추어,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그린뉴딜을 설정하고,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대내외적으로 선포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외 경제협력 역시, 정부의 이러한 기조 아래 2021년 7월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을 통해 2025년까지 그린 ODA 비중을 OECD 평균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는 등 변화하는 개발환경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그린 ODA 비중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기후위험을 분석하고, 나아가 기후사업에 대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체계의 유형별 특징, 주요 공여기관 현황 등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기후변화 대응체계

1. 기후위험 관리체계

기후변화 대응체계는 기후위험 관리체계와 기후사업의 성과관리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기후위험 관리체계를 살펴보기 전, 기후위험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에서는 기후위험을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다양한 가치 중 하나 이상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거나 그러할 잠재가능성) 즉, 기후변화 관련 위험(Hazard), 이에 대한 노출(Exposure), 취약성(Vulnerability)간 상호

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결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정의는 모든 양자 및 다자원조 기관이 따르고 있는 개념이다.

이러한 기후위험을 분석, 대응하는 기후위험 관리체계는 기후주류화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어, 주요 공여기관에서는 사업의 기획·준비 단계부터 잠재적 기후위험을 식별하고, 중대위험으로 파악되는 경우 기후위험 경감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사업에 반영하는 일련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기후위험 관리체계는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이하 'F/S') 단계에서 기후위험을 평가하는지, 타당성조사 외 별도의 과정을 통해 기후위험을 평가하는지에 따라 <표 1>과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 기후위험 관리체계 주요 유형

구분	유형 1	유형 2
기관	JICA, KfW 등	WB, ADB, USAID 등
F/S 연관성	F/S 내 한 요소로 포함	F/S와 별도로 수행
방법론	IPCC 기후위험분석 방법론	IPCC 기후위험분석 방법론과 함께 자체 방법론 활용
기후위험 분석범위	프로젝트	국가, 프로그램/프로젝트, 과업 등

자료: Deloitte Analysis.

타당성조사의 과업 중 하나로 기후위험 평가를 수행하는 '유형 1'의 경우, 일반적으로 IPCC의 기후위험 정의에 기초하여 프로젝트 수준의

기후위험을 평가·관리한다. 이 유형의 특징은, 기후위험 평가가 사업의 기획·발굴 단계에서 타당성조사의 과업 중 하나로 실시되어, 기후 변화를 포함한 환경사회 영향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기후위험 평가 업무를 전문업체에 일임하여 공여기관의 업무가 경감될 수 있다.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JICA, KfW 등이 있다.

반면, 타당성조사와는 별도로 기후위험을 평가하는 ‘유형 2’의 경우 IPCC 기후위험 분석 방법론 외에도 기관별로 자체 프로세스 및 방법론을 활용해 고도화된 기후위험 관리를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본 유형은 프로젝트 수준의 기후위험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수원국의 지원 전략 등을 수립할 때 기후위험을 통합적으로 고려한다. 기관의 지원 전략과 기후위험을 연계하는 일은 높은 기후 전문성을 요구하는 바, 기후사업 경험이 축적되고, 조직 내 충분한 기후 관련 전문가를 보유한 기관이 수행 가능하다. 이 유형에는 WB, ADB, USAID 등이 속한다.

2. 기후사업 성과관리 체계

기후위험 관리체계와 함께, 기후사업의 성과관리 체계도 기후 주류화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기후사업의 성과관리 체계란, 기후 변화 완화 혹은 적응에 기여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그 성과를 계량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후사업의 성과관리 체계는 평가대상, 시점에 따라 <표 2>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 기후사업 성과관리 체계 주요 유형

구분	유형 1	유형 2	유형 3
기관	JICA, KfW 등	USAID	GCF
주요 내용	온실가스 감축량을 사전에 예측	성과지표를 통해 적응 및 완화 사업의 성과를 사후적으로 측정	적응 및 완화 사업의 성과를 사업의 발굴준비 및 평가단계에 걸쳐 관리
대상 사업	기후변화 완화 사업	기후변화 완화, 적응 사업	기후변화 완화, 적응 사업
평가 단계	발굴·준비	(사후) 평가	발굴·준비, (사후) 평가

자료: Deloitte Analysis.

먼저, 첫 번째 유형은 기후변화 완화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발굴·준비 단계에서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한다. 동 유형은 완화사업의 예상 성과를 사업 초기단계부터 고려하도록 하여, 완화사업의 성과 확대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기여 가능한 반면, 기후변화 적응 사업에 대한 성과는 측정하지 않아 기후사업의 통합적인 성과관리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 유형에는 JICA, KfW 등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사업의 발굴·준비 단계가 아닌, 사후 평가과정에서 기후 관련 성과가 인지되었을 경우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기후사업의 성과를 측정한다. 동 유형은 기후변화 적응사업 및 완화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하나, 성과를 사업 설계 단계부터 고려하지는 않아, 기후사업 성과의 전략적 확대 관점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동 유형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는 USAID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의 경우 완화 및 적응사업의 성과를 발굴·준비, 사후평가 과정에서 고려하여 기후사업(적응, 완화)에 대한 가장 통합적이고 고도화된 성과관리 유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하 'GCF')이 이에 속한다.

III. 주요 공여기관 현황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기후위험 대응체계의 유형별 대표기관인 JICA, KfW, USAID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일본 JICA

(1) 기후변화 지원 현황

OECD의 기후 관련 개발금융 통계에 따르면, 2015~2019년(누적, constant prices, 2019년) JICA의 지원규모는 427억불(연평균 85억불)로, 분석대상 DAC 공여기관 중 1위 수준이다. 이는 5년간 약 100억불(누적)을 개도국 기후금융에 지원할 것을 약속한 일본 정부의 'Cool Earth Partnership(2008-2012)'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측된다.

동 기간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된 분야는 철도교통이 42.9%(금액 기준)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그 외 전력 송배전(중앙그리드) 6.5%, 도로

교통 6.1%, 위생(대규모) 5.7%, 석탄발전 5.6%이다. 여기서의 석탄 발전은 고효율 기술 활용, 연료 효율성 제고 등을 포함하여 기후사업에 해당한다.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비중(리우마커 기준)을 살펴보면 기후 변화 완화 74.6%, 적응 23.2%, 완화·적응 공통 2.2%로 기후변화 완화 사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지원대상국은 금액 기준 인도(26.2%), 방글라데시(13.9%), 필리핀(12.9%), 인도네시아(5.7%), 베트남(5.5%) 등 아시아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2)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전략

JICA는 ① ‘제4차 중기전략(4th Medium-term Plan, 2017~2021년)’의 기반요소 중 하나로 파리 기후협약 이행 및 기후변화 대응을 언급하고 있으며, ② ‘지속가능한 탄소제로 사회로의 도달을 위한 JICA 협력방안 (JICA's Cooperation on Climate Change: Towards a Sustainable and Zero-carbon Society, 2018)’에서는 기후위험 평가 및 대응을 기관의 주요 우선순위²⁾ 중 하나로 식별하고, 사업 단계별로 체계적인 기후 리스크 내재화 방안과 기후변화 관련 주요 마일스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 관련 사항은 JICA 글로벌 환경부 내 기후변화 부서

2) JICA의 기후변화 관련 4대 우선순위는 1)저탄소 및 기후 회복력 있는 도시 개발 및 인프라 투자, 2) 기후위험 평가 및 대응방안 강화, 3) 기후 정책 및 기관 역량 개발 지원, 4) 자원보존, 산림관리, 생태계 강화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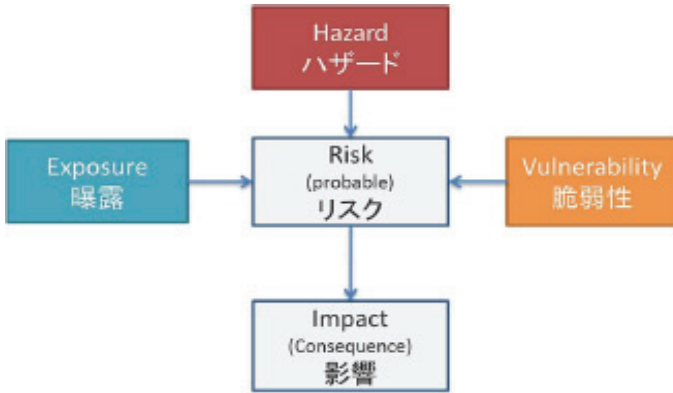
(Office of Climate Change, Global Environment Department)에 의해 통합 관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 부서는 JICA 사업 내 기후 주류화 추진을 담당하여, 사업 발굴 및 준비 단계부터 기후요소가 사업 계획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고, 협의를 주도한다.

(3) 기후위험 관리 체계

JICA는 기후변화 주류화를 목적으로 ‘Climate-FIT(Climate Finance Impact Tool) for adaptation’을 개발하여 전 사업을 대상으로 기후 위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JICA의 Climate FIT은 2011년 도입된 이후 2019년 업데이트된 바 있는데, 주요 변경내용은 기후위험 평가 대상을 기후변화 적응사업에서 전체 사업으로 확대한 점이다.

JICA의 Climate-FIT은 IPCC에서 정한 방법론에 기초하고 있으며, 특히 IPCC의 ‘제5차 평가보고서(2014)’에 따라 기후위험(Risk)을 위해 (Hazard), 노출(Exposure), 취약성(Vulnerability)의 상호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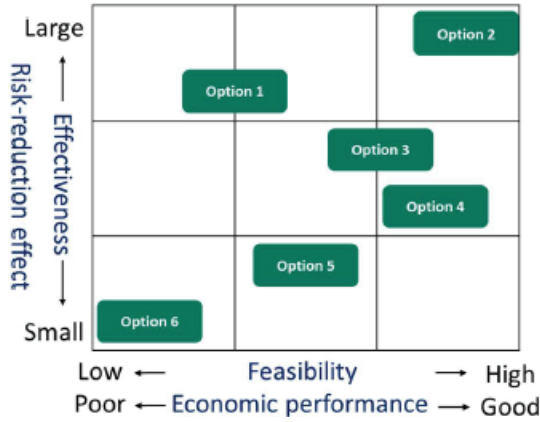
〈그림 1〉 JICA의 기후위험 관련 주요개념 체계도



출처: JICA, 'Climate Finance Impact Tool for Adaptation', 2019

JICA는 사업의 발굴 및 준비, 실행, 평가단계에서 기후위험 관리를 수행하며, 특히, 사업의 발굴 및 준비 단계에서는 타당성조사시 Climate-FIT for adaptation을 활용하여 기후위험을 식별하고, 위험 저감방안(경감계획)을 도출,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한다. 이 때 저감방안은, △경제성, △효과성, △실행가능성의 관점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경제성의 관점에서는 해당 저감방안을 채택할 때 그 비용이 합리적인지, 비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 효과성의 관점에서는 해당 저감방안이 식별된 기후위험을 경감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인지를 고려하며, 실행가능성의 관점에서는 기술적, 정책적, 조직적,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저감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고려한다.

〈그림 2〉 JICA 기후위험 경감계획 도출 시 고려 요소



출처: JICA, 'Climate Finance Impact Tool for Adaptation', 2019

이후 기후변화 요소를 포함한 사업 기획을 마무리하고, 수원국과 협정을 체결하며, 사업 진행 과정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프로젝트에 적용된 기후위험의 저감방안(기후위험 경감계획)이 효과적으로 적용, 시행되고 있는지 평가·관리한다.

(4) 기후사업 성과 관리체계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에서 온실가스 감축량(제거량)에 대한 MRV(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요구가 대두되었다. 이에 JICA는 2011년 'Climate-FIT for Mitigation'을 개발, 2019년에는 이를 업데이트하여 사업 설계 단계부터 온실가스 감축량을 측정하고 있다. 즉, Climate-FIT for Mitigation은 기후변화 완화사업의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성과)을 사전에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다.

JICA는 산림, 교통 및 교통수단, 에너지 절약,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위생 등 6개 분야(21개 하위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법론(methodology sheet) 및 계산 서식(calculation sheet)을 개발하였으며, 비교적 계산방법이 단순한 점이 특징이다.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기후 변화 완화 사업이라고 판단될 경우,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사업의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을 측정하고, 이후 사업 실행 단계에서 예상 감축량을 재검토, 사후 모니터링 및 평가를 수행한다.

〈표 3〉 JICA Climate-FIT-Mitigation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기본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론 서식(methodology sheet) 및 계산 서식(calculation sheet)을 활용하여 사업의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을 산정함. 본 서식은 원칙적으로 기 구축된 방법론(GHG Protocol, ISO 14064, CDM 방법론 등의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기준)을 기준으로 하며, JICA의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 산정 경험에 근거함 대상 사업 관련 내용이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론 서식 및 계산 서식에서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이는 'Climate-FIT-Mitigation'에서 제시하는 측정 대상 사업, 기본 원칙, 사업 범위, 계산 방법, 보고 방법에 따라야 함
계산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 산정식: “(온실가스 감축량) = (베이스라인 배출량) - (프로젝트 예상 배출량)” 베이스라인 배출량: 프로젝트가 없을 때 발생할 온실가스의 배출량이며, 합리적으로 입증되는 가상의 배출량 프로젝트 예상 배출량: JICA가 지원하는 프로젝트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프로젝트 이행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중, 6개의 측정 대상 온실가스 외의 배출원은 ‘누출(leakages)’로 간주하며, 원칙적으로 ‘누출’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포고려 ‘베이스라인 배출량’과 ‘프로젝트 예상 배출량’은 원칙적으로 활동 데이터에 배출 인자를 곱하여 계량화
보고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수행기관은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론(methodology sheet)에 따라 작성된 계산 서식(calculation sheet)을 JICA에 제출해야 함. 또한, 계산의 근거 및 참고 자료를 제출해야 함

출처: JICA, 'Climate Finance Impact Tool for Mitigation', 2019

2. 독일 KfW(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1) 기후변화 지원 현황

OECD의 기후 관련 개발금융 통계에 따르면, 2015~19년간 KfW의 기후관련 개발금융 지원규모는 175억불로 이는 분석 대상 양자 공여 기관 중 JICA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동 기간 주요 지원분야는 송배전(중앙그리드) 16.3%, 재생에너지 발전 13.3%, 에너지 보존 및 수요측면(demand-side) 효율성 8.4%, 수자원·위생(대규모) 6.6%, 제도권 금융증개 5.8%이다.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비중은 기후변화 완화 74.1%, 적응 13.4%, 완화·적응 공통 12.5%로, JICA와 마찬가지로 KfW 역시 기후변화 완화사업에 집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주요 지원대상국은 인도 23.1%, 인도네시아 7.5%, 멕시코 6.7%, 모로코 6.4%, 남아프리카 5.5% 순이다.

(2) 기후위험 관리 체계

KfW는 지속가능성 가이드라인(Sustainability Guideline, 2021)에 따라 기후위험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KfW는 모든 사업(all funding activities)을 대상으로 발굴·준비단계부터 기후위험을 고려한다.

먼저 프로젝트 기획 단계의 일환으로, 사업이 기후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또는 관련 위험이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초기 스크리닝을 실시한다. 사업이 장기간 인프라 건설과 관련되거나 기후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되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참고로, 석탄화력발전 등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후 초기 스크리닝 결과를 활용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수행되는 분석은 타 기관에서도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IPCC의 제5차 평가보고서에 기술된 기후위험 분석 방법론에 기초하고 있다. 첫 단계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해 회복력을 높이는 사업(예: 가뭄의 경우에 처리한 폐수를 재사용하거나 내한 작물을 재배하는 것)과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효과(effect)를 검토하고, 그 후 사업의 기후위험을 분석한다. 분석시 기후변화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기후변화가 (사업이 목표로 하는 시스템 외부의) 인구 또는 생태계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한다.

사업의 이행 및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사전에 합의된 기후위험 저감 조치가 잘 적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사업수행기관과 협의하여 독립적인 제3자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3) 기후사업 성과 관리체계

KfW는 ‘지속가능성 가이드라인(Sustainability Guideline, 2021)’에 따라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기후변화 완화사업을 대상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발굴 단계에서,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회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후 타당성조사시 지원분야의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추이, 해당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또는 감소 기여도, 수원국 전략(예: NDC)과의 양립 여부, 온실가스 감축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정책 및 비용 측면의 효율성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옵션을 도출하고, 가능한 경우 이를 사업 계획에 통합한다. 이 때 온실가스 배출량 혹은 탄소발자국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산출하고 있다.

사업의 이행,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사업 발굴준비 과정에서 합의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실제 사업 수행시 적용되었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독립적인 제3의 기관에게 모니터링을 요구할 수 있다.

3. 미국 USAID

(1) 기후변화 지원 현황

USAID의 2015~19년간 기후관련 개발금융 누적 지원규모는 51억불로, 앞서 분석한 JICA, KfW 대비 지원금액이 적은 편이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지원금액 감소에 기인한 영향이 크다. 그러나 2020년 11월 당선된 바이든 대통령은 '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넷-제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명령 및 투자금 유치 등을 위한 활동을 취임 4년 내 이행할 것을 공표하였으며, 2021년 1월에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재가입하는 등 미국 정부의 기후변화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따라, USAID의 향후 기후변화 관련 지원규모는 다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 기간 주요 지원분야는 농업 정책 및 행정 관리(14.3%), 농업 개발(13.7%), 생물권 보호(13.6%), 생물다양성(10.9%), 에너지 정책 및 행정 관리(9.3%) 순이며,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비중은 완화·적응 공통 46.4%, 완화 28.9%, 적응 24.7%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동시에 고려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요 지원 대상국은 에티오피아(8.1%), 인도네시아(3.7%), 파키스탄(3.2%), 과테말라(3.2%), 탄자니아(2.4%) 등이다.

(2)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전략

USAID는 2012년 ① ‘기후변화 및 개발전략(Climate Change and Development Strategy, 2012년-2018년)’을 통해 기후복원력 있는, 저(低)배출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세 가지 전략적 목표(적응, 완화, 통합) 및 이행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본 전략의 후속 전략으로, 2021년 11월 ② ‘기후변화 전략(Climate Strategy)’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개도국 온실가스 60억톤 감축(이산화탄소 환산톤), △기후 관련 공공, 민간 재원 1,500억불 동원, △기후복원력 관련 500백만명 지원 등의 목표를 제시하는 등 향후 10년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복원력을 높이고자 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3) 기후위험 관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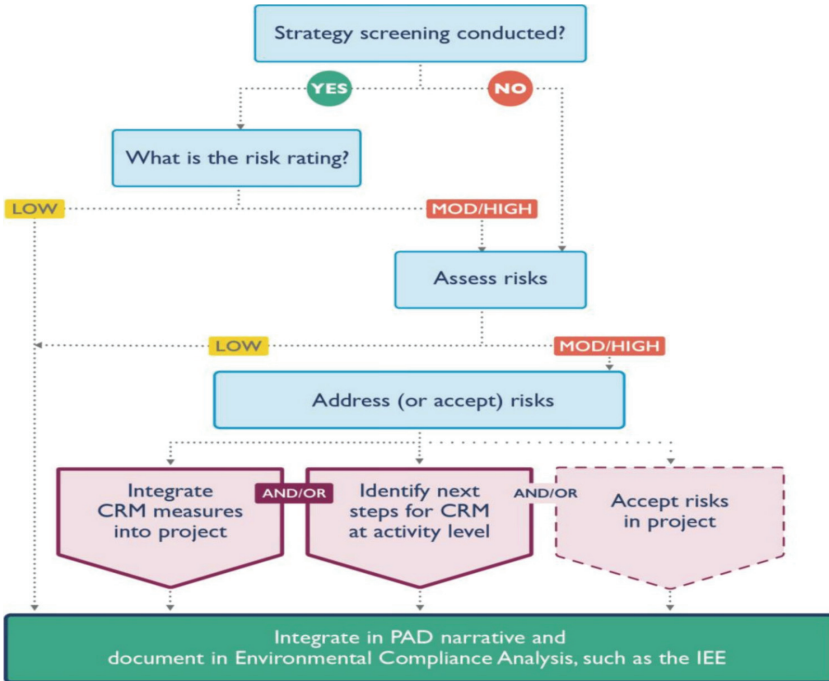
USAID는 사업 운영 지침(ADS 201, Automated Directive System 201, 2021)³⁾에 부속지침(Climate Risk Management for USAID Projects and Activities, 2021)을 추가하여, △지역별/국별 개발협력전략, △프로젝트, △세부 과업 활동 등 총 세 단계의 기획 과정에 기후위험을 평가, 대응하고, 이를 모니터링, 평가하고 있다. 국가 수준의 기후위험이란 수원국별 기후위험을 의미하며, 주로 각 수원국의 지원전략 등을 수립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사업 단계의 기후위험이란 사업의 발굴준비,

3) ADS 201은 사업 주기별 운영정책(Program Cycle Operational Policy)을 포함함

이행, 평가 단계에 걸친 전 과정에서 기후변화가 사업에 미치는 위험을 의미하며, 활동 수준의 기후위험이란 사업 내 세부 과업별 기후위험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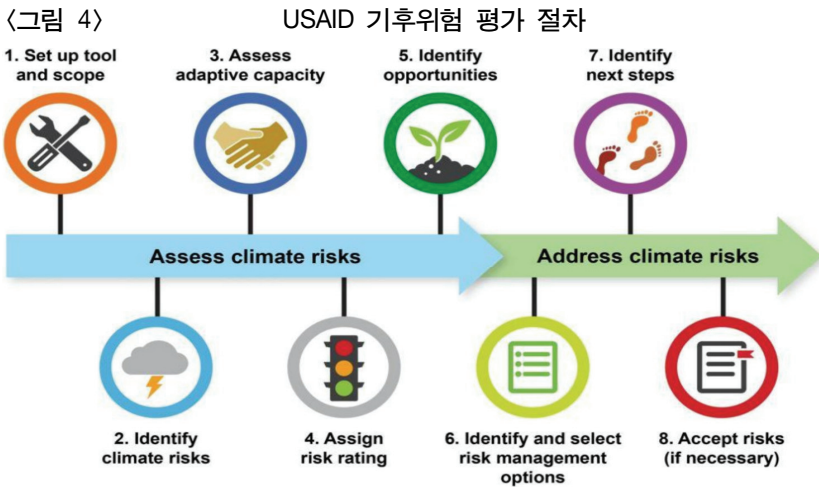
이 중 사업단계의 기후위험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기후위험을 평가하나, 지역별/국별 개발협력전략 수준에서 기후위험이 낮게 평가된 지역의 경우 <그림 2>에 따라, 사업(프로젝트) 수준의 기후위험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그림 3> USAID 기후위험 관리 체계도 - 프로젝트 수준



출처: USAID, Climate Risk Screening and Management Tool for use in project design.

구체적으로 사업의 발굴·준비 단계에서의 기후위험 평가는 ① 도구와 범주 설정, ② 기후위험 파악, ③ 적응 가능 역량 파악, ④ 기후위험 분류, ⑤ 기회요인 분석으로 구성되며, 기후위험 대응은 ⑥ 위험관리 방안 파악 및 선정, ⑦ 후속단계 파악 ⑧ (불가피한 경우) 위험 수용으로 구성된다.



출처: USAID, Climate Risk Screening and Management Tool for use in project design.

(4) 기후사업 성과 관리체계

미국 정부가 설정한 국제협력 분야 중, 기후변화와 관련된 분야는 ‘경제성장(EG: Economic Growth)’ 내 △적용 △청정에너지 △지속 가능한 자연경관⁴⁾이다. USAID는 사후평가 단계에서 해당 분야의 사업

4) USAID는 미국 정부의 국제협력 분야 구분에 따라 기후변화 사업 관련 표준 성과지표를 제시하며, 기후변화 사업 내 산업별 지표를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음

성과가 확인된 경우 <표 3>의 USAID 글로벌 기후변화 표준 지표(Global Climate Change Standard Indicator, 이하 ‘GCC’)를 활용하여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PPR(Performance Plan and Report)’⁵⁾에 보고한다. 한편, USAID는 사업 수행기관이 해당 지표 보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엑셀 형식의 ‘GCC 표준지표 보고 템플릿’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⁶⁾

<표 4> USAID 글로벌 기후변화 표준 지표

EG	분류	지표	지표 대상구분
EG 11 기후변화 - 적응			
11-1	연수	미국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진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의 연수생 수	남/여
11-2	조직 역량	미국 정부 지원으로 기후변화 위험 평가 또는 대응 역량이 향상된 조직의 수	중앙정부/ 지역정부/기타
11-3	법적/정책적 환경	미국 정부 지원으로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제안/도입/이행된 법·정책·제도·표준 개수	- 중앙정부 (제안/도입/이행) - 지역정부 (제안/도입/이행) - 권역·국제 (제안/도입/이행)
11-4	투자 조성	미국 정부 지원으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조성된 재원의 규모(USD)	- 공공 자원 (국내, 국제) - 민간 자원(국내)
11-5	적응 수혜자	미국 정부 지원으로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할 수 있게 된 수혜자 수	남/여
11-6	적응 역량	미국 정부 지원으로 기후정보 활용 또는 기후위험 감소활동을 추진하여 기후복원력을 개선하게 된 수혜자 수	남/여

5) 성과 계획 및 보고서(PPR)는 해외 원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USAID 및 국무부(DoS, Department of State)의 모든 운영 단위(OU, Operating Units)에 매년 요청되는 성과 데이터임

6) <https://www.climatelinks.org/climate-change-monitoring-evaluation-resources>

EG 12 기후변화 - 청정에너지			
12-1	연수	미국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진 청정에너지 프로그램의 연수생 수	남/여
12-2	제도적 역량	미국 정부 지원으로 청정에너지 관련 역량이 향상된 조직의 수	중앙정부/ 지역정부/기타
12-3	법적/ 정책적 환경	미국 정부 지원으로 청정에너지와 관련하여 제안/도입/이행된 법·정책·제도·표준 개수	- 중앙정부 (제안/도입/이행) - 지역정부 (제안/도입/이행) - 권역·국제 (제안/도입/이행)
12-4	투자 조성	미국 정부 지원으로 청정에너지에 투자된 자원의 규모(USD)	- 공공 자원 (국내, 국제) - 민간 자원 (국내, 국제)
12-5	청정에너지 발전(MWs)	미국 정부 지원으로 재원조달(financial closure)이 완료된 청정에너지 발전 용량	태양/풍력/수력/ 지열/바이오매스· 바이오연료/기타
12-6	온실가스 배출량	미국 정부 지원으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감축·흡수·방지된 온실가스 배출량	(해당없음)
12-7	예상 감축량	미국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진 청정에너지 관련 법·정책·제도·기술로 2030년까지 감축 또는 방지된 온실가스 배출량(예상수치)	1년~5년/ 6년~10년/ 11년~15년
EG 7.1 현대식 에너지 접근 개선			
7.1 -1	청정에너지 수혜자	미국 정부 지원으로 에너지서비스 개선의 혜택을 받은 수혜자 수	남/여
EG 13 기후변화 - 지속가능한 자연경관			
13-1	연수	미국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진 지속가능한 자연경관 프로그램의 연수생 수	남/여
13-2	조직 역량	미국 정부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자연경관 문제 대응 역량이 향상된 조직의 수	중앙정부/ 지역정부/기타

13-3	법적/정책적 환경	미국 정부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자연 경관과 관련하여 제안/도입/이행된법·정책·제도·표준 갯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제안/도입/이행) - 지역정부 (제안/도입/이행) - 권역·국제 (제안/도입/이행)
13-4	투자 조성	미국 정부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자연 경관을 위해 조성된 재원의 규모(U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자원 (국내, 국제) - 민간 자원 (국내, 국제)
13-5	지속가능한 자연경관 수혜자	미국 정부 지원으로 이행된 지속가능한 자연 경관 활동을 통해 생활에 부수적 혜택(재정 또는 비재정적)을 받게 된 수혜자 수	남/여
13-6	온실가스 배출량	미국 정부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자연경관 분야에서 감축·흡수·방지된 온실가스 배출량	(해당없음)
13-7	예상 감축량	미국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진 지속가능한 자연경관 관련 법·정책·제도·기술로 2030년까지 감축 또는 방지된 온실가스 배출량(예상수치)	1년~5년/ 6년~10년/ 11년~15년
13-8 ⁷⁾	지속가능한 자연경관 헥타르	미국 정부 지원의 결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 관리 대상 헥타르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산림/비산림) - 복구(산림/비산림) - 관리(산림/비산림)

자료: USAID, 'Global Climate Change: Standard Indicator Summary Sheet', 2020

7) 13-8지표는 2020년에 업데이트된 지표임

IV. 시사점

수원국의 기후변화 관련 개발수요 확대 추세 속에서, 선진 원조 기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혹은 전략 수립, 개도국 내 기후 사업 확대 등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이슈에 적절히 대응하고, 효과적·효율적 방식으로 기후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시에, 증가하는 기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해당 기관들은 기후 위험 관리 체계와 기후사업의 성과관리 체계를 수립하였는데, 이는 국제 사회에서 기후주류화를 위한 핵심 요소로 간주되고 있는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기후위험 관리체계는 모든 사업(일반사업과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사업 포괄)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으며, 기후 사업(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사업)의 성과관리는 기후사업의 성과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측정, 보고, 검증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글로벌 기후 주류화 움직임에 따라 국내 개발협력 분야에서도 최근 기후 주류화를 위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사업의 취약성을 분석하고, 기후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기후변화 대응체계 수립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서 분석한 기후변화 대응체계의 유형별 특징을 고려하여, 각 기관에 맞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경우 ODA 사업의 기후 관련 취약성을

최소화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동시에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저탄소 전환을 실현하여, 한국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학술지/논문

- GCF, 'Integrated Results Management Framework', 2021
- GCF, 'Updated Strategic Plan for the Green Climate Fund, 2020-2023', 2020
- JICA, '4th Medium-term Plan 2017-2021', 2017
- JICA, 'Annual Report', 2021
- JICA, 'Climate Finance Impact Tool for Adaptation', 2011
- JICA, 'Climate Finance Impact Tool for Adaptation', 2019
- JICA, 'Climate Finance Impact Tool for Mitigation', 2019
- JICA, 'JICA's Cooperation on Climate Change: Towards a Sustainable and Zero-carbon Society', 2018
- JICA, 'Organization Chart', 2021
- KfW, '2020 Sustainability Report', 2020
- KfW, 'Sustainability Guideline,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Social, and Climate Aspects: Principles and Procedures', 2021
- OECD, 'Aligning Development Cooperation and Climate Action', 2019
- OECD, 'Integrat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into Development Cooperation', 2009
- OECD, 'Revised Climate Marker Handbook'
- OECD, 'Strengthening Climate Resilience: Guidance for Governments and Development Co-operation', 2021
- USAID, 'Climate Risk Management for USAID Projects and Activities', 2021
- USAID, 'Climate Risk Screening and Management Tool for use in Project Design', 2017
- USAID, 'Climate Strategy Factsheet', 2021
- 관계부처합동,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021
- 관계부처합동, 'ODA 중점협력국 재선정', 2021

관계부처합동,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 2015
관계부처합동,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 2021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17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결과(안)', 2017
기획재정부, 'EDCF 고도화 방안', 2021
기획재정부, 'Post-코로나 EDCF 운용 전략', 2021
기획재정부, '그린 EDCF 추진 전략', 2021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 '기후변화 2014 종합보고서' 20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ODA사업의 기후변화 주류화 평가', 20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OECD 개발원조위원회 기후변화 지침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1

2. 인터넷자료

JICA Climate FIT Adaptation

(https://www.jica.go.jp/english/our_work/climate_change/adaptation.html)

JICA Climate FIT Mitigation

(https://www.jica.go.jp/english/our_work/climate_change/mitigation.html)

OECD Climate Related Development Finance

(<https://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topics/climate-change.htm>)

USAID Climate Links Climate Risk Profiles

(<https://www.climatelinks.org>)

World Bank Climate Change Knowledge Portal

(<https://climateknowledgeportal.worldbank.org>)

EDCF

II. 분야별, 국가별 개발협력 논의동향

포스트 코로나 보건 ODA 현황 및 시사점
해외어항 개발협력사업 추진 방향 및 시사점

포스트 코로나 보건 ODA 현황 및 시사점¹⁾

목 차

- I. 머리말
 - II. 개도국의 보건의료 현황 및 정책
 - 1. 현황
 - 2. 정책
 - III. 국제사회의 보건의료분야 ODA 동향
 - 1. 미국
 - 2. 일본
 - 3. 독일
 - 4. 소결
 - IV. 맺음말
- 참고문헌

1) 본 원고는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안정훈 교수)이 수행한 ‘포스트 코로나 보건 의료분야 EDCF 지원전략’ 연구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힘.

1. 머리말

COVID-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많은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에서도 감염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개도국은 보건의료체계가 취약하여, 진단검사와 같은 기초적인 대응이 미흡해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활동 마비 등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요 공여기관의 개도국 COVID-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원조는 UN의 2030년 지속가능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SDGs는 2000~2015년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 대비 개발협력 목표 수립 시 보건의료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SDGs는 보건의료의 형평성 강화를 강조하면서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을 보건의료 분야의 SDGs 달성을 위한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과거 UHC는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 도입 등 한정적인 목표로만 이해되었으나, 최근에는 범위가 확대되어 모든 개인과 지역사회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필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다만, 의료제도는 국가마다 상이하므로 UHC 달성에 한가지 정답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각국의 보건의료 현황 및 정책 방향에 대한 분석을 먼저 실시한 후 UHC 목표 설정 및 설정된 목표에 부합하는 원조를 지원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다.

한편,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이하 'EDCF')은 지난 30년간 병원건립, 의료기자재 공급 등을 중심으로 수원국의 보건의료 자원 확충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노력해왔다. 그러나 COVID-19 대응 및 UHC 달성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지원방식 및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개도국의 보건의료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개도국의 보건의료 현황 및 정책을 살펴본 후, 주요 공여국의 보건의료 분야 ODA 지원현황 및 전략,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분야 지원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개도국의 보건의료 현황 및 정책

1. 현황

World Bank DataBank 중 Health Nutrition and Population Statistics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반적인 개도국²⁾의 보건의료 현황을 선진국³⁾과 비교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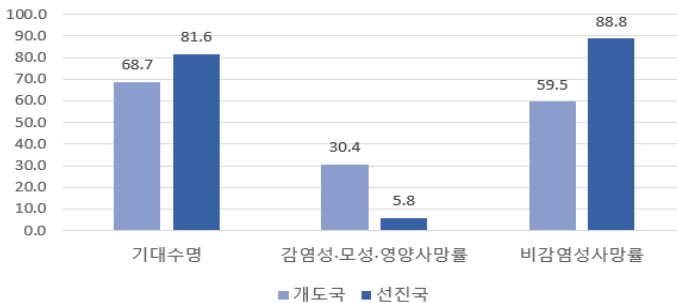
2) UN 최빈국 분류, 세계은행(WB)의 소득그룹별 국가분류 및 OECD의 구축성원조 국가 분류에 따른 EDCF 지원대상 77개국

3) OECD DAC donor이며 IMF Advanced Economies에 속하는 27개국

1) 기대수명 및 사망률

2018년 기준 개도국의 평균 기대수명은 68.7세로, 선진국의 81.6세 대비 12.9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사망률을 살펴봤을 때, 2019년 기준 개도국의 감염성·모성·영양 관련 사망률은⁴⁾ 30.4%, 비감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59.5%이며, 선진국의 경우 감염성·모성·영양 관련 사망률은 5.8%, 비감염성 질환 사망률은 88.8%이다. 즉, 개도국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예방접종 등 기초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을 통해 예방 가능한 감염성 질환, 모성 사망 및 영양 결핍 관련 사망률이 높아 관련 인프라 및 의료서비스가 열악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 기대수명 및 사망률 현황 (2018, 2019년 기준)



출처: World Bank Data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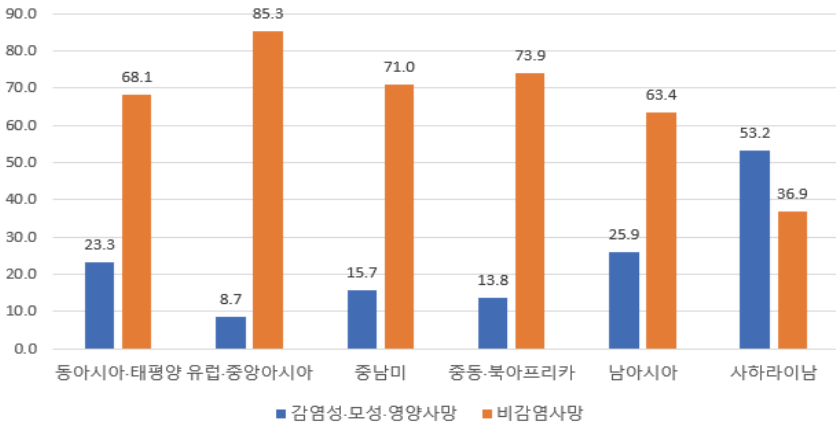
지역별⁵⁾로 살펴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53.2%로 감염성·

4) Cause of death by communicable diseases and maternal, prenatal and nutrition conditions

5) World Bank 지역 분류 기준에 따른 7개 지역: 동아시아·태평양(East Asia and Pacific), 유럽·중앙아시아(Europe and Central Asia), 중남미(Latin America and Caribbean), 중동·북아프리카(Middle East and North Africa), 북미(North America), 남아시아(South Asia), 사하라이남(Sub-Saharan Africa)

모성·영양 관련 사망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남아시아 25.9%, 동아시아·태평양 23.3%, 중남미 15.7%, 중동·북아프리카 13.8%, 유럽·중앙아시아 8.7% 순이다.

〈그림 2〉 개도국 지역별 사망률 (201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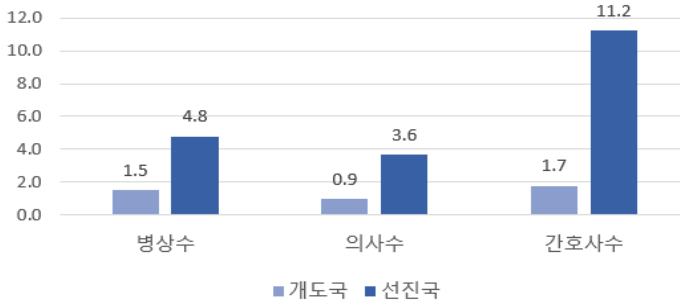


출처: World Bank DataBank

2) 보건의료 인프라

개도국과 선진국을 비교했을 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와 간호사 수는 0.9명 대 3.6명, 1.7명 대 11.2명으로 개도국의 보건의료 인력 수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개도국 1.5개 대비 선진국 4.8개로 개도국의 전반적인 보건의료 인프라가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캄보디아의 경우 1,000명당 의사 수 0.1명, 간호사 수 1.0명, 병상 수 0.8개로 극심한 인력난 및 병상 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그림 3〉 개도국 대 선진국 보건의료 인프라
(인구 1,000명, 2017년, 201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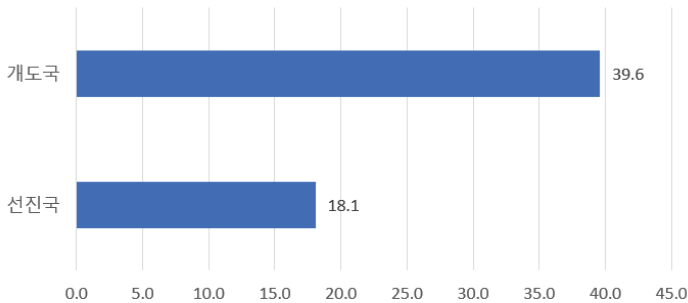


출처: World Bank DataBank

3) 본인부담금

대부분의 개도국은 UHC를 달성하지 못하여 의료비용지출 중 본인 부담금(Out-of-pocket expenditure) 비율이 선진국 평균보다 높았다. 2018년 기준 개도국 평균 본인부담금은 39.6%로 선진국의 18.1% 대비 2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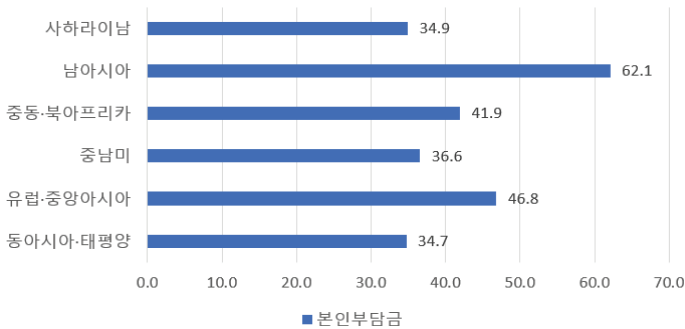
〈그림 4〉 개도국 대 선진국 본인부담금 (2018년 기준)



출처: World Bank DataBank

지역별로는 남아시아가 62.1%로 가장 높았으며 유럽·중양아시아 46.8%, 중동·북아프리카 41.9%, 중남미 36.6%, 사하라 이남 34.9%, 동아시아·태평양 34.7% 순이다.

〈그림 5〉 지역별 본인부담금 (201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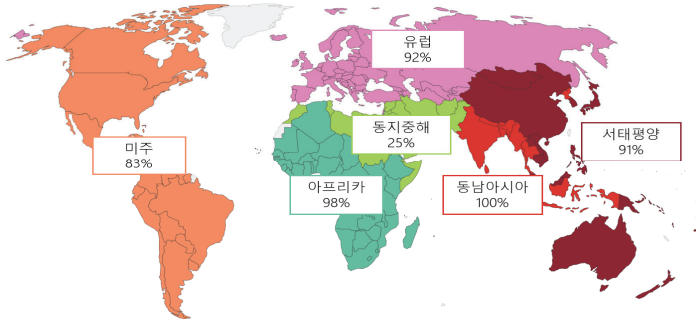
출처: World Bank DataBank

2. 정책

국제사회는 2015년 9월 UN 정상회의에서 SDGs를 채택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SDGs는 기존 MDGs와 달리 보건, 교육, 인프라, 경제개발, 환경개발, 사회개발 등을 모두 포괄하며 특히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접근(Leave no one behind)’원칙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 평등,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에 따라 다수의 개도국이 UHC 달성을 보건의료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본 절에서는 개도국의 보건의료정책을 UHC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UHC의 ‘모든 사람이 재정적 위험 없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정의⁶⁾에 따를 때 UHC는 의료서비스 보장과 재정적 보호 보장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동 요소는 공적 의료비의 측면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insured) 확대(Membership, UHC의 넓이), 비용분담의 측면에서 본인 부담액(OOP, Out of Pocket, UHC의 높이) 축소, 그리고 급여서비스의 확충(Benefit Package, UHC의 깊이)을 통한 보장성 확대라고 볼 수 있다.⁷⁾ 아래 <그림 6>은 지역별로 UHC 달성과 관련된 정책 혹은 전략을 보유한 국가 비중을 보여준다. 동지중해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그 비중은 80% 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모든 국가가 UHC를 국가 보건정책의 주요 의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지역별 UHC 달성을 목표로 한 정책 보유 국가 비중(2019년 기준)



출처: WHO, Country Planning Cycle Database

6) WHO 홈페이지, Universal Health Coverage. http://www.who.int/health_financing/universal_coverage_definition/en/

7) 윤기종 (2015). 개발도상국 전범(典範)으로서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고찰. 사회보장법학, 4(1), 171-210.

아래 <표 1>에서는 주요 개도국의 UHC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주요 개도국의 UHC 관련 보건정책

구분		보건의료 정책/전략/계획	추진전략
아 프 리 카	에티오피아	Health Sector Transformation Plan 2015-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 의료 질 및 보장성 강화 • 리더십 및 거버넌스 • 보건의료 역량강화
	남아프리카	National Department of Health Strategic Plan 2015-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 부담 완화 • 보건의료체계 강화 • 보건의료정보시스템 개선 • UHC 달성 • 보건의료인력 역량강화 • 근거기반 의료 개선
아 메 리 카	도미니카	Strategic Plan for Health 2010-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정보시스템 강화 • 국가건강보험 시행 • 보건재정관련 시스템 시행 • 보건의료인력 강화
	콜롬비아	Ten Year Public Health Plan 2012-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부담 완화 • 보건의료체계 강화 • 전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 • 다양한 계층 대상 정책 및 프로그램 제공
동 부 지 중 해	아프가니스탄	Afghanistan National Health Policy 2016-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버넌스 • 보건의료체계 강화 • 공중보건 • 보건의료서비스
	이집트	(전략은 없으며 2015년 방향 제시 백서만 발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HC 달성 • 거버넌스 • 보건의료재정 강화 •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유 럽	조지아	Georgian Healthcare System State Concept 2014-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재정 강화 •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보건의료정보시스템 개선 • 전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 • 보건의료체계 강화

유럽	카자흐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azakhstan 2030 • Strategic plan for 2014-2018 of Ministry of Healthcare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증진 및 사망률 감소 • 보건의료체계 효율성 제고 •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강화
동남아시아	방글라데시	4th Health, Population and Nutrition Sector Programme 2017-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버넌스 • 보건의료체계 강화 • UHC 달성 • 보건의료인력 역량강화 • 근거기반 의사결정체계 구축
	네팔	Nepal Health Sector Strategy 2015-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 의료서비스 질 강화 • 보건의료체계 개혁 • 다분야적 접근
서태평양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r people's health protection, care and promotion 2016-2020 • 2017 Communist Party Resolution on People's Health Protection, Care, and Improv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HC 달성 • 보건의료체계 강화 • 보건의료인력 양성 • 취약계층 보호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hilippines Health Agenda 2016-2022 • UHC Act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보건 개선 • 감염성 질환 발생률 감소 • 비전염성질환 예방 • UHC 달성

출처: WHO, Country Planning Cycle Database

필리핀과 베트남의 UHC 달성 노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필리핀은 2016년 기준 본인부담 의료비 비중이 54%로 높은 편이었다. 이에 2019년 두테르테 대통령은 국민의 재정보호와 의료접근성 증대를 목표로 약제비 및 응급의료비를 포함한 포괄적인 외래의료비용의 급여화 등의 내용을 담은 UHC 법안⁸⁾을 추진하였다. 베트남의 경우

8) Philippines DoH, Universal Health Care Law. (2019.07)

2017년 건강 보호, 진료, 개선에 대한 공산당 결의안(2017 Communist Party Resolution on People's Health Protection, Care, and Improvement)을 발표하였는데, 동 결의안은 낙후된 의료 시설 및 서비스 개선, 건강보험 재정확보를 통한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재정부담 완화 및 의료 접근성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⁹⁾ 이 외에도 많은 개도국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UHC 달성을 국정목표로 수립하였다.

III. 국제사회의 보건의료분야 ODA 동향

본 절에서는 주요 공여국인 미국, 일본, 독일의 보건의료 ODA 특징과 사례, 최근 동향을 분석하였다.

1. 미국¹⁰⁾

1) 보건의료 ODA 동향

OECD DAC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보건의료 분야 ODA 규모는 2018년 기준 19억달러, 최대 공여국이다. 대부분 무상원조(grant)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양자원조 및 다자원조 비중은 각각 46.1%, 53.9%이다. 2008-2017년 OECD DAC의 CRS 원조목적코드 보건분야(120)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한 대륙별 무상원조 지원비중은 아프리카(41%), 아시아

9) Communist Party of Vietnam Resolution on the protection care and improvement of people's health in the new situation, (2017,10)

10) Supporting Evidence-Based Advocacy For Global Development. <https://donortracker.org/country/united-states>

(18%), 아메리카(5%), 유럽/오세아니아(1%) 순이다. 분야별로는 2017년 기준 전염병 관리(21%), 생식 보건(21%), 말라리아 관리(18%), 가족계획(16%), 기초보건(12%) 순이다.¹¹⁾

이외에도 ODA 실적으로 집계되지는 않지만, 게이츠재단은 수원국 앞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연간 예산액의 약 60%를 보건의료 분야에 투입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매년 증가 추세로, 이는 미국 보건의료 ODA 전체 지원액을 능가하는 수준이다(게이츠재단 전체 무상원조 규모 2019년 40억 불, 2020년 50억불).

2) UHC¹²⁾

미국은 2015년 SDGs 수립 이후, USAID의 지원 우선순위 및 목표와 UHC 달성과의 전략적 연계성을 높이고 있다. USAID는 UHC 달성을 위해 특히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현지 의료기관 구축, 이를 통한 의료체계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USAID는 위 전략을 따름과 동시에 수원국이 개발원조로부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¹³⁾ USAID는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보건의료 인력, 재정, 거버넌스, 정보, 의약품·백신·의료기술, 그리고 서비스 전달체계에 집중하고 있다.

11) 국제사회의 ODA 동향.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원. <http://cms.ewha.ac.kr/user/indexSub.action?codyMenuSeq=23533639&siteId=idhs&menuUIType=tab>

12) USAID, 「Demystifying 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2015.12)

13) USAID, 「Access to Universal Health Coverage through High-Performing Health Care」. (2019.09)

〈표 2〉

USAID의 의료체계 강화 달성 방향

구분	세부내용
보건의료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및 중저소득 국가의 취약한 보건의료 요구에 대한 인력 강화 모델 개발 및 구현 • 의료기술/역량 교육 및 유지보수를 위한 효과적인 모델 개발 및 구현 • 공공 의료 향상을 위한 인력 관리 및 리더십 개선
보건의료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AID 및 USAID 파트너국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 및 민간 자금 확대 • 빈곤층 대상 의료보장 • 차선단체/민관파트너십 등 이용 민간투자 촉진 및 장려
보건의료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법률·정책·계획·리더십 및 관리에 대한 국가 역량 제고 • 정부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민간 역량 구축 • 정책결정 등에 지역/국가/지역사회 보건의료 리더 참여
보건의료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기반 의사결정 도입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접근방식 및 활용도 개선 • USAID 및 USAID 파트너국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통합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개선
의약품· 백신· 의료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 및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위한 공급체계 강화 • 의약품 규제 역량강화를 통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의약품 시스템 및 서비스 관리를 위한 인적 및 기관 역량강화
서비스 전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적이며 근거에 기반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비용 효과적인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출처: USAID, 「USAID's Vision for Health Systems Strengthening(2015-2019)」

USAID의 개도국 UHC 달성 지원사례로 페루, Health Policy Reform Project(HPR)('10-'14) 사업을 들 수 있다. 동 사업은 페루의 보험제도 및 급여체계 구축을 지원한 것으로,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분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USAID는 이를 위해 보건의료분야 개혁 및 분권화에 대한 정책 마련, 보험 및 급여체계 설계, 그리고 감독 기관 및 최소 급여체계를 포함한 UHC 개혁을 통합하는 법률 개정을 지원하였다.

2. 일본¹⁴⁾

1) 보건의료 ODA 동향

일본의 보건분야 ODA 지원 규모는 2018년 기준 3.4억 불로 OECD DAC 4위, 아시아 1위이다. 유상원조 지원규모는 2017년 기준 1.8억불이며, 지역별로는 아프리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수원국의 자주적 개발, 경제성장 촉진, 민관협력을 우선시하며 금리가 낮고 상환 기간이 긴 양허성 차관을 주로 지원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2017년 기준 보건정책 및 행정(30%), 의료서비스(19%), 전염병 관리(18%), 기초 의료 설비(8%), 성생식(7%) 순이다.¹⁵⁾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JICA)는 ‘평화와 건강을 위한 기본 디자인’ 표어에 맞추어 보건시스템 강화, 모자 건강, 질병 관리를 우선순위로 설정하였다.

JICA의 대표적인 지원사례는 <표 3>의 케냐 UHC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차관이다. JICA는 2015년 1차 프로그램 차관을 지원(40억 엔)한 후, 2020년 8월 80억 엔 규모의 2차 프로그램 차관을 지원하였다(금리 0.95%, 10년 거치, 만기 30년). 동 프로그램은 케냐의 UHC 달성을 위한

14) Supporting Evidence-Based Advocacy For Global Development. <https://donortracker.org/country/japan>

15) 국제사회의 ODA 동향.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원. <http://cms.ewha.ac.kr/user/indexSub.action?codyMenuSeq=23533648&siteId=idhs&menuUIType=tab>

정책 초안 마련, UHC 운영매뉴얼 작성 지원, 무상 주산기 진료제공 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예산 지원, 군 단위 정부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역할 강화 등의 정책으로 구성된다.

〈표 3〉 JICA 케냐 유상원조 추진 사례

구분	1차 산업	2차 산업
수행연도	2015년	2020년
차관금액	40억 엔	80억 엔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icy based program • JICA는 케냐정부와 2030년까지 UHC 달성에 필요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건강정책, 2) 케냐 2014-2018 보건부문 전략 및 투자 계획 컨설팅 3) UHC 로드맵 초안 작성 등 총 13개 정책¹⁶⁾ 조치를 수립하고 예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icy based program • 케냐의 건강 재정 및 서비스 제공 강화와 같은 UHC 달성에 필요한 우선순위가 높은 조치에 대한 예산 지원 • SDGs 3(보건), 10(불평등 감소) 달성에 기여 목표

출처: JICA Ex-ante Evaluation (2015). 「Health Sector Policy Loan for Attainment of the Universal Health Coverage」

이외에도 JICA는 베트남 3대 중앙병원(베트남 호치민 Cho Ray 병원, 하노이 Bach Mai 병원, Hue Central 병원) 앞 의료인력 교육훈련

16) 13개 정책: (1)국민건강정책, (2)케냐 2014-2018 보건부문 전략 및 투자 계획 컨설팅, (3)UHC 로드맵 초안 작성, (4)HISP 구현 매뉴얼 수립, (5)FMS 개념 노트 작성 및 2014-15년도 FMS에 대한 GOK 예산 승인, (6)ASAL 용 HSSF-RBF 구현 매뉴얼 수립, (7)Ministry of Health의 보건문 조정 및 정부 간 업무 부서의 참조 조건 명확히 정의, (8)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표준 승인, (9)케냐 2014-2018 보건부문 전략 및 투자 계획 승인, (10)건강관리재정전략 초안 작성, 필수 건강 패키지 개요 GHC 운영위원회와 공유, (11)상황 분석 결과를 담은 FMS 운영 매뉴얼 작성 및 2015-16년도 FMS에 대한 GOK 예산 승인, (12)카운티 수준의 보건시스템 관리에 대한 교육 요구 평가 수행, (13)Community Health Service 표준 MOH 내, 카운티 정부에 전파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베트남 호치민 Cho Ray 병원에 286억 차관을 지원하여 1,000개의 병상 확대, 의료장비 조달, 보건의료 ICT 기술 개발 및 입찰 지원, 시공 감리, 병원 경영구조 개선, ICT 운영 등을 지원하였다. 중심 지역에 위치한 Cho Ray 병원의 병상 확대를 통해 베트남 중앙지역 병원의 과부하 현상 해결에 기여하였으며, 동 사업 외에도 베트남 도시와 농촌의 의료서비스 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지역 병원 대상 인력개발, 의료장비 개선을 위한 차관을 지원하였다.¹⁷⁾

2) UHC

일본 정부는 2013년 6월 제5차 도쿄 국제 아프리카 개발회의(TICADV)의 국제 보건외교전략 발표 및 2015년 아베 총리의 Lancet 기고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UHC 달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JICA는 1)감염병 대응 및 탄력적인 보건의료시스템 지원, 2)의료 체계 강화, 3)비전염성질환 관리, 4)생식, 산모, 신생아 및 아동건강(RMNCH) 개선 등 4대 분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개도국 UHC 달성을 지원 중이다. 위 목표 중 의료체계 강화는 <표 4>와 같이 보건 의료관리, 보건의료서비스 및 보건의료인력에 집중하고 있다.

17) JICA 웹사이트, https://www.jica.go.jp/english/our_work/evaluation/oda_loan/economic_cooperation/index.html 「Ex-Ante Evaluation (for Japanese ODA Loan)」 Cho Ray Viet Nam - Japan Friendship Hospital Development Project

〈표 4〉

JICA의 의료체계 강화 지원방향

구분	세부내용
보건의료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및 중앙 정부 역량강화 • 보건의료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정부의 의료시설·장비·의약품·백신·의료인력 등에 대한 포괄적 계획 수립 지원
보건의료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보건의료시설 확충 • 환자 전원체계 강화를 위한 2차 의료기관 강화 • 5S-KAIZEN(지속적 질 향상)-TQM(총체적 질관리) 도입을 통한 의료시설 질 관리
보건의료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교육을 통한 기존 보건의료인력 역량강화 •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시설 설립 및 커리큘럼, 교육기자재 개선 • 인력양성·채용·유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인력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출처: JICA, JICA's Operation in Health Sector

일본의 UHC 추진전략 관련 주요 시사점은 게이츠재단 등 외부 국제개발협력기관과의 협력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WHO가 발족한 UHC 파트너십¹⁸⁾(이하 'UHC-P')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2015년 아베 총리 명의의 보건의료분야 국제저명 학술지 Lancet 기고문에서도 표방하듯이 일본의 선진 의료 기술과 자금으로 개발도상국의 UHC 달성을 지원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있다(Abe, 2015). 이러한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일본 정부는 게이츠 재단과 일본 제약기업을 지원하는 Global Health Innovative Technology(GHIT) 기금을 설립하여 6개 일본 제약사

18) 국가의 지속 가능하고 탄력적인 보건의료체계 운영을 통해 견고한 국민건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18년 Joint Working Team(JWT)을 조직한 이후 참여국이 EU,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룩셈부르크, UK 등으로 확대되며 지원 대상국 또한 증가하고 있음.

중심의 국제 컨소시엄(해외 저명 대학이나 개도국의 의과대학 등 포함)이 개도국의 주요 질병(결핵, 말라리아, 비전염성 질환들) 예방 백신, 진단법,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¹⁹⁾. 현재 이 기금의 Full Partner로 일본 외무성, 일본 후생노동성, UNDP, 게이츠재단, 영국의 웰컴 트러스트, 6개 일본 제약사(아스텔라스, 추가이 中外 제약, 다이이치-산교, 에이사이, 시오노기 제약, 타케다 제약)가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유사한 방식의 개발기금을 국제개발협력 기관과 설립하여 명분과 실리를 추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3. 독일²⁰⁾

1) 보건의료 ODA 동향

독일의 ODA 보건의료 원조 규모는 2018년 기준 6.8억 불로 OECD DAC 3위이며, 2017년 유상원조 규모는 1.4억불이다. 독일은 특히 보건시스템, 빈곤, 소외 열대질환과 국제 파트너십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Middle-East and North Africa, 이하. MENA) 국가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고, 2017년 G20 의제에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시키는 등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19) GHIT Fund 홈페이지 <https://www.ghitfund.org/en>

20) Supporting Evidence-Based Advocacy For Global Development. <https://donortracker.org/country/germany>

독일의 연방경제협력개발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BMZ)는 인권을 개발협력 활동의 기본 철학으로 채택하여 이를 반영하는 보건 ODA 전략을 펼치고 있다.²¹⁾ 주요 보건 협력 키워드는 건강, 인권, UHC, 건강보험, 보건시스템, 어린이 및 청소년 건강, 에이즈,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 전염병, HIV/AIDS, 결핵, 소아마비, 소외 열대 질환, 성생식, 모자보건, 가족계획, 병원 파트너십, 2030 보건아젠다 등이다. 2017년 보건 ODA 분야별 지원비중은 전염병 관리(27%), 기초 의료설비(21%), 생식 보건(12%),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11%), 의료서비스(7%) 순이다.

2) UHC

BMZ는 2007년 프랑스와 P4H(Providing for Health) Network²²⁾ 출범에 동참하였으며, UHC 2030의 전신인 International Health Partnership Plus(IHP+) 등의 UHC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등 개도국의 UHC 달성에 주력하여 왔다. 2015년 SDGs 의제 발표 이후 BMZ는 개도국의 UHC 달성 중 특히 빈곤층 및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보장에 주목하여 동 목표 도달에 필수적인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표 5>와 같이 지원하고 있다.²³⁾

21) 국제사회의 ODA 동향.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원. <http://cms.ewha.ac.kr/user/indexSub.action?codyMenuSeq=23533641&siteId=idhs&menuUIType=tab>

22) 2007년 독일,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WB, WHO, ILO, 및 AfDB와 함께 UHC 달성 및 사회보장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함. 주요 목표는 본인부담금 완화를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임.

23) BMZ: Health systems 홈페이지, <https://www.bmz.de/en/issues/gesundheitsysteme/index.html>

〈표 5〉

BMZ의 의료체계 강화 지원방향

구분	세부내용
보건의료인력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제공 및 전문성 개발 • WHO Practice on International Recruitment of Health Personnel 추진 등 국내외 이주정책 및 보건인력 채용 정책 회담 • Global Health Workforce Alliance의 지원 및 협력 • 전문인력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및 근무조건 수립 지원
보건의료재정 및 의료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제도, 건강보험제도,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보건의료재정 모델 개발 • Health Initiative(P4H)의 지원 및 협력
보건의료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체계 분산 지원 • 보건분야 개혁 개발 및 이행 지원 •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대상 그룹의 기획·모니터링·평가(Monitoring and Evaluation M&E) 참여 촉진 • 보건 세부분야별 지원 • 1차 및 2차 보건의료인프라 확장 및 개선 지원
민간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관련 민간협력사업 지원 • 민간 의약품 생산·공급·유통채널 개발 및 강화
부문간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 및 건강증진에 집중 • “health in all policies” 지원 • 비전염성 질환 해결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개발 촉진
인권기반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외 및 취약계층 요구를 고려한 포괄적 전략 개발 및 추진 지원 • 환자권리 강화, 불만 및 해결 체계 개발

출처: JMunir ,K. (2016). 「Health Systems Strengthening in German Development Cooperation: Desk Study」

4. 소결

주요 공여국의 ODA 동향 조사 결과, 공여국별로 중점 지원대상국이 다르며, 차별화된 지원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원대상국은 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일부 아시아 지역이며, UHC 달성과 함께 수원국의 자립 역시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궁극적으로는

수원국의 자주적 개발 및 경제성장 달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재원 활용 등 EDCF 다각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게이츠재단 등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기관들과 융자원조전환 (loan conversion)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사업들을 기획하여 차관 도입에 대한 수원국의 부담을 줄이고 명분과 실리를 같이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각 국제기관들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내 산업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앞 사업 참여 기회를 투명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원 분야는 국가별 우선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전염병, 생식보건,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분야별 지원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평등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보장, 즉 UHC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진공여국은 최근 COVID-19로 인해 보건의료분야를 중점 지원 분야로 삼고 있는 바,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의 추세에 맞추어 진단키트 등 경쟁력을 지닌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원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IV. 맺음말

우리나라의 보건분야 ODA 지원 규모는 2018년 기준 1.9억 불로 OECD DAC 국가 중 10위 수준이다. 그 중 유상원조는 0.64억불을 차지하고 있다.²⁴⁾ 우리나라의 주요 ODA 기관별 보건분야 추진전략²⁵⁾을 살펴보면 SDGs 전략에 맞춰 수원국의 UHC 달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최근 우리 정부가 발표한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에 따르면 보건 ODA 규모를 확대하고, 수원국의 COVID-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기초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러한 국제 보건위기 대응 강화 전략은 WHO의 UHC 전략 기조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ODA 중점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을 살펴보면 기초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을 통한 UHC 달성을 다양한 국가의 지원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UHC는 상위 목표로만 제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전략은 미비한 실정이다. 선진 공여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ODA는 보건의료체계, 의료보장, 보건인력 등 하위 분야별 전략을 포괄하는 UHC 달성전략이 없으며 하위 분야에 대해 개별적인 사업 형태로 진행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분야별, 개별적 접근보다는 통합적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4) OECD DAC Statistics

25) EDCF는 병원건립, 의료기자재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의료접근성 확대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음. KOICA는 모든 사람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기여 목표를 중심으로 모자청소년 보건서비스, 식수 위생 개선 및 포괄적 영양서비스, 질병예방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 중임. 또한 KOFIH는 모자보건·보건의료체계강화, 결핵 등 감염병 관리역량강화, 보건의료 인적역량 강화 등의 인도주의적 사업을 실행 중임.

앞 절에서도 언급하였듯, 선진 공여국은 UHC 달성을 상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 ODA도 UHC라는 큰 전략 안에서 다양한 재원조달 방식의 패키지를 이용해 수원국의 UHC 달성과 연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수원국의 보건의료시스템 강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의료자원 공급이 아니라 제도적 정비를 포함한 중장기적 운영방안, 공급된 의료자원의 2차적 활용, 그리고 더 나아가 수원국의 자립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KSP 프로그램의 UHC 정책자문 결과에 따라 국민의료보험 시스템 강화 후속사업을 지원하거나, 선진 공여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백신 공급, 실험실 역량강화, IT 기반 모니터링 기술 전수 등 패키지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유일한 국가인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강점을 접목하고 타 국제 공여기관과 협력한다면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강민아 (2016). 「보편적 건강보장의 이론적 원칙과 현실적 실천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 정책동향, 1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 국민건강보험 「2018 건강보험통계연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건강보험 재정 기여 효과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 「바레인, 지속 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과 손을 잡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HIRA 시스템.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990001000500&cmsurl=/cms/guide_busi/01/02/index.html [접속일: 2020년 12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의료보장제도.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11000000&cmsurl=/cms/policy/02/01/1341867_27024.html&subject=%ec%9d%98%eb%a3%8c%eb%b3%b4%ec%9e%a5%ec%a0%9c%eb%8f%84 [접속일: 2021년 3월 4일]

경제발전 공유사업 (2014). 「2014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 세계은행」 국가통계포털. 1인당 국민 총소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AS017 [접속일: 2021년 2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d02300m01.do> [접속일: 2021년 2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Atlas) 구축 3차 연구」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2013). 「보건분야 ODA 종합평가 결과」

국제사회의 ODA 동향.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원 홈페이지.

http://cms.ewha.ac.kr/user/indexSub_action?codyMenuSeq=23533640&siteId=idhs&menuUIType=tab [접속일: 2020년 12월 02일]

기획재정부 (2019). 「2019/20 KSP Policy Consultation Report (Enhancing Institutional and Managerial Capacities for Securing Universal Health Care in the Philippines)」

기획재정부 (2021). 「Post-코로나 EDCF 운용 전략」.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s://www.moef.go.kr> [접속일: 2020년 11월 11일]

김양희 (2018).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본 인도네시아 보건의료전달체계 현황과 문제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양희, 변진옥 (2020). 「단일보험자는 강력한 구매자인가: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보건행정학회지, 30(2): 151-163.

김현경, 강신욱, 노대명, 이현주, 전진아, 강성욱, 박복영, 신상문, 조정윤, 허윤선, 이병재 (2015). 「보건복지분야 ODA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 보고서(수시) 2015-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혜경 (2016).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국토, p.6-12.

관계부처 합동 (2020).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나성섭 (2019). 「보건의료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아시아개발은행의 역할」, 국제사회보장리뷰 10: 34-4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동남아 주요국 코로나19 관련 동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인도, 남아시아 주요국 코로나19 관련 동향」

대외경제협력기금 홈페이지. <https://www.edcfkorea.go.kr> [접속일: 2020년 11월 1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0). “인도네시아,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원격 진료 도입”,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https://www.khidi.or.kr/board/view?linkId=48825041&menuId=MENU01523> [접속일: 2021년 3월 4일]

대한예방의학회 (2019).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예방의학 교과서. 대한예방의학회 편찬위원회.

윤기중 (2015). 「개발도상국 전범(典範)으로서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고찰」. 사회보장법학, 4(1), p.171-210.

이경태 (2019). 「인도 신의료보험 도입으로 의료 관련 시장 유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시장뉴스

문상식, 최만규, 소재진, 정민수, 문상진 (2018). 보건행정학(7판). 서울: 보문각.

보건복지부,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2018). 「의료기관 건축설계 가이드라인 연구」

보건복지부 (2019). 「2019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2020). 「All About Korea's Response to COVID-19」. 보건복지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2017).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동향」
<https://www.khidi.or.kr/board/view?linkId=222232&menuId=MENU01523>

서울연구원 (2020). 「'코로나19' 치료병상 정보 실시간 공개 및 진단검사 접근성 제고 (인도 델리 NCT)」

서울의료원 건강증진센터: 국가건강검진 소개
<https://www.seoulmc.or.kr/pms/contents/contents.do?contseqn=524&decorator=healthweb&menucdv=05010000> [접속일: 2020년 12월 30일]

서지우 (2019). 「2019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국립중앙의료원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 「2017 식품의약품 산업동향통계」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2020). 「백신 보관 및 수송 관리 가이드라인 - 제조·수입·도매·의료기관용」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7). 「신개념 의료기기 전망 분석보고서」

신유원 (2020). 「코로나19(COVID-19) 전세계 확산에 따른 주요국 동향 및 2020년 1/4분기 국내 보건산업 수출 현황과 시사점」. 보건산업브리프, vol.29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심보람 (2013). 「필리핀 의료보장제도 현황과 과제- 보편적 건강보장을 중심으로」

양돈선 (2006). 「중장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전략」. 나라경제, 2006년 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오충현 (2015).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한 KOICA 보건분야 중장기 전략 수립에 대한 정책적 제언」. 국제개발협력, p131-142. 한국국제협력단 (KOICA).

- 우한나 (2018). 「필리핀 보건기기시장 진출정보」. 보건산업브리프 의료기기 해외시장분석, vol.5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이수형 (2016).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분석과 이행전략: 보건 의료를 중심으로」,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p96-114. 보건복지 포럼.
- 이주영, 송지애, 유애라 (2020). 「국제사회의 감염병 대응 ODA 현황과 시사점」. KIEP.
- 장준영 (2020). 「미안마의 코로나19 확산과 정부 대응」, 국제사회보장리뷰 15: 73-87
- 정지선, 유애라 (2020). 「국제사회의 SDGs 이행성과와 코로나 이후 한국의 ODA 정책과제」. KIEP.
- 조명선 (2016). 「캄보디아의 간호교육 현황 및 이슈」. 한국보건간호학회지, 30(2): 288
- 질병관리청 (2019). 「2018년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 발표」. 보도자료
- 질병관리청 (2020). 「2020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제 2·3·4 위험군)」
- 질병관리청 (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보도우미.
<https://nip.cdc.go.kr/irgd/introduce.do?MnLv1=1&MnLv2=5> [접속일: 2021년 2월 17일]
- 한국개발연구원 (2014).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사업 - 2014년도 예비 타당성조사 보고서」
-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2020). 「2020년 베트남 의료서비스 산업 현황 및 전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OECD Health Statistics 2020」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7). 「지방의료원 설립 등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연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9a). 「2019 의료기기산업 분석보고서」. 자체사업 보고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9b). 「신남방 보건의료산업 협력 추진방안」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9c). 「신북방 보건의료산업 협력 추진방안」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 종합정보시스템.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57> [접속일: 2021년 2월 1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관 해외진출정보.
<https://www.khidi.or.kr/koheh/board?menuId=MENU02464> [접속일: 2020년 11월 16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5). 중저개발국의 보편적 의료보장(UHC)달성을 위한 의료기술평가 확산. <https://hineca.kr/573> [접속일: 2021년 2월 11일]

한국수출입은행 (2019b).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안내책자(국문).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2015). 「2015 한국제약산업 연구개발백서」.
<https://pmaconference.mahidol.ac.th/site/previosConference/6437066b-86c8-4f88-8a56-70d5976e721a> [접속일: 2020년 12월 3일]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스마트의료 사이버보안 가이드」

해외조달정보센터 (2021). 「IDB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전략 및 주요 승인 프로젝트(보건부문) 동향」. 해외조달동향 주간 브리핑 보고서(12주차)

Abe S. (2015). 「Japan's vision for a peaceful and healthier world」. The Lancet, 386(10011): 2367-2369.

ADB (2020a). 「How countries in Asia and the Pacific are working toward UHC and controlling COVID-19」
<https://www.adb.org/news/features/how-countries-asia-and-pacific-a-re-working-toward-universal-health-coverage-and> [접속일: 2021년 2월 11일]

ADB (2020b). 「ADB's Comprehensive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ADB (2020c). 「\$9 Billion ADB Facility to Help Members Access and Distribute COVID-19 Vaccines」

ADB (2020d). 「COVID-19 Emergency Response Project: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Review Framework」

AFD (2020a).
<https://www.afd.fr/en/page-thematique-axe/health-and-social-protection> [접속일: 2020년 12월 30일]

AFD (2020b). 「AFD's Response to the COVID-19 Crisis」

AfDB (2017). 「Developing coordinated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systems for financing health in Africa」

AfDB (2021). <https://www.afdb-org.kr/about/high5s/> [접속일: 2020년 2월 13일]

BMZ (2020a). 「Emergency COVID-19 Support Programme」

BMZ (2020b). 「Issues-Fighting infectious diseases-a goa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ttps://www.bmz.de/en/issues/infectiousdiseases/index.html> [접속일: 2020년 12월 02일]

Communist Party of Vietnam (2017). 「Resolution on the Protection care and improvement of people's health in the new situation」

Donor Tracker (2020a). 「How are donor countries responding to COVID-19? Early analyses and trends to watch」. Webinar 2020.05.13.
<https://donortracker.org/insights/how-are-donor-countries-responding-covid-19-early-analyses-and-trends-watch> [접속일: 2020년 12월 30일]

Donor Tracker (2020b). <https://donortracker.org/> [접속일: 2020년 12월 28일]

FHI 360. <https://www.fhi360.org/projects/infectious-disease-detection-and-surveillance-idds> [접속일: 2020년 12월 02일]

Frontier (2020). "Testing times: Myanmar struggles to keep pace as COVID-19 takes off"
<https://www.frontiermyanmar.net/en/testing-times-myanmar-struggles-to-keep-pace-as-covid-19-takes-off/> [접속일: 2021년 3월 4일]

IDB Social Protection and Health Division (2016). 「Health and Nutrition Sector Framework Document」

IHME Measuring what matters, GBD Compare. <https://vizhub.healthdata.org/gbd-compare/> [접속일: 2021년 02월 19일]

IMF (2020).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0: A Long and Difficult Ascent – Statistical Appendix」

JICA (2010). 「JICA's Operation in Health Sector - Present and Future」

JICA (2014a).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ject(Egypt-Japan Education Partnership)」. Ex-Ante Evaluation

JICA(2014b). JICA signs innovative financing agreement with Gates Foundation for Polio eradication in Nigeria.
https://www.jica.go.jp/usa/english/office/others/newsletter/2014/1409_10_02.html [접속일: 2021년 1월 10일]

JICA (2015a). 「Cho Ray Viet Nam - Japan Friendship Hospital Development Project」. Ex-Ante Evaluation

JICA (2015b). 「Health Sector Policy Loan for Attainment of the Universal Health Coverage」. Ex-Ante Evaluation

JICA (2015b). 「Maternal, Neonatal and Child Health(MNCH) and Health System Improvement Project」. Ex-Ante Evaluation

JICA (2015c). 「Signing of Loan Agreement with Kenya」 Press Release. JICA.
https://www.jica.go.jp/english/news/press/2015/150818_01.html
[접속일: 2020년 12월 3일]

JICA (2019). 「JICA's Cooperation for Infectious Disease Control: Basic Policy」

JICA (2021a). 「Project for strengthening Community Health Strategy」, JICA. <https://www.jica.go.jp/project/english/kenya/003/index.html>
[접속일: 2021년 1월 10일]

JICA (2021b). 「The Project for Development of Rapid Diagnostics and the Establishment of an Alert System for Outbreaks of Yellow Fever and Rift Valley Fever in Kenya」
<https://www.jica.go.jp/project/english/kenya/006/index.html> [접속일: 2021년 1월 10일]

JICA (2021c). 「The Project for the Reinforcement of Vaccine Storage in Kenya」.
<https://www.jica.go.jp/oda/project/1160540/index.html> [접속일: 2021년 1월 10일]

KOICA (2013). 「필리핀 의료보험 역량강화사업」

- KOTRA 해외시장 뉴스 (2020). 「미얀마 보건의료산업」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781/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85030&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 [접속일: 2021년 3월 4일]
- KOTRA 해외시장뉴스 (2020).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 지속 성장 전망」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781/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80361&column=title&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1039132&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earchIndustryCateldx=&searchItemName=&searchItemCode=&page=1&row=10>
- KOTRA 해외시장뉴스 (2020).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동향」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781/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85226&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earchIndustryCateldx=&searchItemName=&searchItemCode=&page=1&row=10> [접속일: 2021년 3월 24일]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Japan (2014) 「White Paper on Development Cooperation 2014」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Japan (2017), 「White Paper on Development Cooperation 2017」
- Munir K, et al (2016). 「Health Systems Strengthening in German Development Cooperation: Desk Study」
- OCHA (2020), 「Myanmar: COVID-19 Humanitarian Situation Report No.11」
- OECD Query Wizard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접속일: 2020년 2월 4일]
- OECD (2020). 「2020 Report on the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DA」 [https://one.oecd.org/document/DCD/DAC\(2020\)54/FINAL/en/pdf](https://one.oecd.org/document/DCD/DAC(2020)54/FINAL/en/pdf) [접속일: 2021년 2월 9일]

OECD (2021). Out-of-pocket expenditure as percentage of current health expenditure (CHE) [접속일: 2021년 2월 9일]

OECD-DAC (2020a). <http://www.oecd.org/dac/development-assistance-committee> [접속일: 2020년 11월 12일]

OECD-DAC (2020b). List of ODA Recipients for reporting 2020 flows [접속일: 2020년 12월 08일]

Our World in Data, Coronavirus(COVID-19) Testing.
<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testing> [접속일: 2021년 3월 4일]

Philippines DoH (2019). 「Universal Health Care Law」

PMAC (2016). Prince Mahidol Award Conference 2016 Archive.
<https://pmaconference.mahidol.ac.th/site/previosConference/6437066b-86c8-4f88-8a56-70d5976e721a> [접속일: 2020년 11월 1일]

Sachs, J., et al. (2020).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COVID-19.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ripen Tantivess, et al (2017).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capacity development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Experiences from the international units of HITAP and NICE」

The Commonwealth Fund, International Health Care System Profiles, India (2020).
<https://www.commonwealthfund.org/international-health-policy-center/countries/india#universal-coverage> [접속일: 2020년 2월 19일]

Universal Health Coverage Partnership (2020).
<https://www.uhcpartnership.net/about/> [접속일: 2020년 12월 09일]

USAID (2019). 「Access to Universal Health Coverage through High-Performing Helath Care」

USAID (2020). 「Report to the Pandemic Response Accountability Committee on the Use of Covered Funds」

WHO (2004). 「The Impact of Health Expenditure on Households and Options for Alternative Financing」

WHO (2016a). 「Country Cooperation Strategy Cambodia: 2016-2020」

WHO (2016b). 「Country Cooperation Strategy Indonesia: 2014-2019」
WHO (2017). 「Country Cooperation Strategy Philippines: 2017-2022」
WHO (2019). News: 「Multilateral agencies launch a joint plan to boost global health goals」
<https://www.who.int/news/item/24-09-2019-multilateral-agencies-launch-a-joint-plan-to-boost-global-health-goals> [접속일: 2021년 2월 9일]
WHO (2020a). World Health Statistics 2020 (Monitoring Health for the SDGs)
WHO (2020b). Universal Health Coverage
http://www.who.int/health_financing/universal_coverage_definition/en/
[접속일: 2021년 2월 12일]
WHO, Country Planning Cycle Database [접속일: 2021년 3월 5일]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repository [접속일: 2021년 3월 5일]
World Bank (2020a). 「How the World Bank Group is helping countries with COVID-19 (coronavirus)」
World Bank (2020b). 「Indonesia-Emergency Financing Support for Covid-19 Program-For-Results(PFORR)」
World Bank (2021). 「WBG Vaccine Announcement - Key Facts」
World Bank. <https://www.worldbank.org/en/topic/health> [접속일: 2021년 2월 12일]
World Bank. Health Nutrition and Population Statistics [접속일: 2020년 11월 26일]
Xu K., et al. (2006). 「Understanding the impact of eliminating user fees: utilization an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in Uganda」, Social Science & Medicine 62: 866-868

해외어항 개발협력사업 추진 방향 및 시사점¹⁾

한덕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외협력사업부 부장

목 차

- I. 서론
 - II.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 1. 기존 국내사례
 - 2. 최근 국제동향
 - III. 중점협력국의 선정 및 요청분야
 - 1. 중점협력국의 선정
 - 2. 중점협력국의 요청분야
 - IV. 사업추진 기본방향 및 개발전략
 - 1. 기본방향
 - 2. 개발전략
 - V.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1) 본 원고는 2019년-2020년 해양수산부에서 발주한 ‘해외어항 개발협력 방안 연구’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 동 연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책임으로 연구하고, 도화, 건일 엔지니어링사가 참여하여 수행되었음.

1. 서론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는 2021년 기준 약 118.6억원 규모이다. 총 25개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전년 155.8억원 대비 다소 줄었으나, 내년에도 유사한 규모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해수부 ODA 사업의 전반적인 특징은 과거의 물자지원 위주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탄소중립에 초점을 두어 연안재해, 해양산성화 대응, 수산양식, 해양조사, 수산자원관리 등 해양과학기술을 포함한 하드웨어(물적시설)와 함께 소프트웨어(지식공유)에도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발굴,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해수부 각 산하기관이 가지는 특장점을 살리는 ODA를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 분야 ODA는 농업 등 다른 1차 산업분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전체 ODA에서 여전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전세계 국가의 약 60%를 차지하는 연안 개발도상국은 꾸준히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ODA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 현재 우리나라 전체 ODA 규모를 2배로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고려하였을 때 기후변화, 탄소중립, 해양환경 변화 대응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빈곤타개와 식량안보를 위하여 해양수산 분야 ODA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ODA 수원국의 경우, 1차 산업인 농업과 어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산물을 어획한 뒤 첫 양륙지인 어항과 그 배후부지, 가공 및 유통시설에 대한 지원 협력은 수원국 어민들과 어업공동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또한 수산물 가치사슬 개선과 어획 후 손실(post-harvest loss)을 줄이기 위한 인프라로써 어항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해외어항 개발협력은 우리나라와 협력국의 해양수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UN의 2030년 지속가능개발목표(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수적 기대효과로, 우리나라 원양산업을 지원하고 해외 수산자원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수산식품의 안정적 공급 도모를 위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래에서는 해외어항 개발 협력 관련 기존 사례와 최근 국제동향을 소개하고,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개발전략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1. 기존 국내사례

기존의 해외어항 관련 협력사업은 솔로몬군도, 스리랑카, 탄자니아 등 여러 국가에서 추진되었으나, 예비타당성조사에 그치는 등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구체적으로, 2011년 추진된 솔로몬군도 어항개발 사업은 160m 어항접안시설과 냉동창고를 구축하는 것으로, 1,687백만불의

민관협력(PPP) 방식 유상원조(EDCF)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당사국간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장기간 논의가 지속됨에 따라 무산되고 말았다.

2. 최근 국제동향

세계식량농업기구(이하 'FAO')는 최근 청색어항이니셔티브(Blue Ports Initiative, BPI)를 제안하여 어항이 가지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파급력을 강조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어항이 마리나 등 관광과 친환경적인 공간으로써의 역할이, 개발도상국에서는 빈곤타개와 식량안보를 위한 어획물의 첫 양륙지로서 역할이 더욱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어항 유관시설은 어민들의 지역 복지공간, 해양오염 대응 교육 시설 등으로 활용되어 경제적인 면만이 아닌, 사회적, 친환경적 대응의 거점으로 어항의 잠재력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FAO는 각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를 거쳐 향후 본 이니셔티브 확산을 위한 지역별 워크샵과 가이드라인 제정에도 힘쓸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어촌 뉴딜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여 국내 물적설비 지원과 어민교육에 중심을 두고 있지만, 장단점을 잘 반영하여 해외 ODA사업으로 개발하여 확산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중점협력국의 선정 및 요청분야

1. 중점협력국의 선정

각국의 수산발전계획, 어항건설 및 교육훈련 수요 등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외어항 개발 중점협력국을 <그림 1>과 같이 선정해보았다. 선정된 권역별 해외어항 개발 중점협력국은 세네갈(아프리카 권역), 페루(중남미 권역), 베트남(아시아 권역)이다. 남태평양 권역은 다른 권역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게 도출되어 국가를 선정하지 않았다.

<그림 1> 해외어항 개발협력 중점협력국 선정 결과

구분	아시아	아프리카	남태평양	중남미
1순위	인도네시아	모잠비크	미크로네시아	페루
2순위	미얀마	세네갈	키리바시	칠레
3순위	베트남	가나	피지	에콰도르
4순위	필리핀	탄자니아	투발루	브라질

2. 중점협력국의 요청분야

세네갈은 수산 분야(수산물 위생 및 품질 개선 등) 기능 중심의 어항 시설 구축을 요청하였으며 카누(목선)의 접안시설 부족이 시급하며, 대형어선의 접안이 가능한 기본어항 개발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페루는 지역주민 생활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을 우선시하였으며, 어항과 관광기능을 접목한 다기능어항 개발을 요청하고 있었다. 베트남에서는 어항개발계획 수립 지원 및 피항지를 포함한 안전어항 개발에 대한 수요가 확인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악천후 시 대피 가능한 안전어항 개발협력사업을 요청하였다. 또한 수산물 가공유통시설의 각 권역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었다.

IV. 사업추진 기본방향 및 개발전략

1. 기본방향

해외어항 개발협력 사업을 통한 협력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단순 시설 지원 혹은 인프라 건설이 아닌 소프트웨어(어항 관리 및 유통 관련 교육 훈련 등 인적 역량강화를 통해 지속가능 어업 개선에 기여)와 하드웨어(어항 및 배후 시설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수산업 여건 개선)가 동시에 진행되는 투트랙 사업(Two-Track Policy)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소규모 어항과 중규모 이상의 어항을 구분하여 단기(1순위)적으로는 소규모 어항을 주로 무상원조의 방식으로 추진하고 중장기(2순위)적으로는 중규모 이상의 어항 개발협력을 무상원조 또는 유무상 융합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본 연구사업을 통하여 발굴된 3개국(세네갈, 페루, 베트남)에 대해 우선적으로 해외어항 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해당국 정부와의 연락 및 논의를 바탕으로 장기적이며 순차적인 권역별 해외어항 개발협력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개발전략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을 시작으로 연도별 2-3개 사업을 권역을 구분하여 타당성조사부터 시행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무상원조로 소규모 어업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해외어항 개발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작하고, 상업용 어항 지원 등 비교적 큰 규모의 사업은 유상원조사업 혹은 국제기구와의 다자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EDCF·국제기구·수원국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시행 초기부터 수원국 어항 담당 공무원 및 지역어민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도국 어항 운영 및 관리 기술 발전에 기여하면서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본 사업이 흔들림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효과적인 해외어항 개발협력 추진을 위해서 권역별 최소 1개 국가를 대상으로 본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하며, <그림 2>와 같이 타당성 조사, 본 사업, 사후관리를 모두 포함한다면 최소 5년간의 사업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해외어항 개발협력사업 중장기 추진 로드맵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아시아 (베트남 등)	1. 베트남	사업전 관리	FS조사/C.B.	본사업/C.B.	
	2. 미얀마 등			FS조사/C.B.	본사업/C.B.
아프리카 (세네갈, 가나 등)	1. 세네갈	사업전 관리	FS 조사/C.B.	본사업/C.B.	
	2. 가나 등			FS조사/C.B.	본사업/C.B.
남태평양 (키리바시, 피지 등)	1. 키리바시		FS 조사/C.B.	본사업/C.B.	
	2. 피지 등				FS 조사/C.B.
중남미 (페루, 에콰도르, 등)	1. 페루	사업전 관리	FS 조사/C.B.	필요시, 본 사업 /C.B.	사후관리/C.B.
	2차 사업			FS조사/C.B.	본사업/C.B.

· 역량강화(C.B.)는 FS단계부터 시행하여 현지와의 소통 원활화를 통해 수원국 수요 적극 반영- 코로나 19하에서는 화상연수

출처: 해외어항 개발협력방안 연구(2020)

대상국별 타당성조사는 해양수산부 또는 EDCF 등 관련 부처 혹은 기관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어항개발 및 교육훈련 등은 유·무상 연계사업의 형태로 별도의 전담기관을 두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새로운 기관의 설립이 어려운 경우 어촌어항 전문기관이나 해양수산 개발협력기관에서 추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국별 타당성조사는 사업제안기관, 연구기관 혹은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유상원조사업 지원을 위한 별도의 타당성조사는 EDCF 혹은 사업제안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및 시사점

FAO의 청색어항이니셔티브(BPI)와 같이 청색어항에 대한 관심은 최근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인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과도 연관되어 더욱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할 해외 어항 개발협력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여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사업을 추진한다면, 특히, 어항 인프라 운용 및 관리 기술에 대한 지식 공유사업을 통하여 협력국 어민과 유통가공업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양륙지로써의 어항과 수산물 가공 유통시설의 배후부지 구축 및 활용은 수산물 가치사슬 개선으로 이어져 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와 빈곤타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배후부지에 어민들의 복지시설, 어촌공동체와 어선원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 활용하여 제공된 시설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어항이라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그친다면 사업 종료 후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프라 지원과 함께 현지 수산업협동조합 등 어민공동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이들과 함께 지식공유와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사업의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세네갈, 가나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남성은 주로 어획을 담당하고 여성은 어획후 수산물 유통의 대부분을 맡기 때문에 이러한 가공유통시설 지원협력은 결국 여성 어업인 지원에도 중심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한 양성평등 및 교육지원을 구체적 목표로 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기존에 추진하였던 해외어항 및 해외항만사업의 추진 경과를 잘 유념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규모 어항사업의 경우는 무상원조 위주로 단기적으로 추진하고, 상업용 어항 등 규모가 큰 어항의 경우는 먼저 상대국 및 담당 부서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 운용하여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준비를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백신접종의 확대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는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 하였으나, 오미크론 변이가 출현하여 다시 어려운 상황에 들어서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전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개발 협력도 선진국 주도가 아닌, 개발도상국과 함께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이는 우리나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할 책무라고 생각된다. 상기에서 제시한 사업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여러 어려운 현안이 해결되고 진전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고를 마치고자 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관련부처 합동. 20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관련부처 합동. 20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기획재정부. 세계은행 신탁기금 운영현황과 성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8). 신남방정책 이행 위한 우리나라-베트남 수산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한덕훈 외(2019). 가나의 수산분야 개발협력방안 연구.
한덕훈 외(2020). 해외어항 개발협력 방안연구.
한덕훈, 박영길, 전해은(2020). 군소도서국(SIDS) 개발협력 강화방안.
허장 외(2018). 농림업 분야 중점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
홍현표 외(2011). 해외어항개발을 중심으로 한 해외수산투자 활성화 방안.
해양수산부(2017). 해양수산 ODA사업의 체계적인 확대를 위한 협력모델 개발 연구.
해양수산부(2014). 해외항만개발협력 기본계획수립연구.

2. 해외문헌

- FAO(2009). VUE GÉNÉRALE DU SECTEUR DES PÊCHES NATIONALLA RÉPUBLIQUE DU SÉNÉGAL.
World Bank(2005). Vietnam Fisheries and Aquaculture Sector Study.

2. 온라인 자료

- 세계식량농업기구(FAO).
(<https://www.fao.org/in-action/globefish/news-events/details-news/en/c/1392282/>) (검색일: 2021.12.5.)
ODA KOREA (http://www.odakorea.go.kr/oz_main.OdaMain.do) (검색일: 2020.07.18.)
Fishery and Aquaculture Country Profiles, FAO. (<http://www.fao.org/fishery/countryprofiles/search/en>) (검색일: 2020.07.05.)

중서부기니아어업위원회(Fishery Committee For the West Central Gulf of Guinea(FCWC)). (<https://www.fcwc-fish.org/.../1579-ghana,-china-sign-agreemen>) (검색일: 2019.08.20.)

세계은행(World Bank). (<http://projects.worldbank.org/search?lang=en&searchTerm=fish>) (검색일: 2019.08.28.)

EDCF

III. 개발협력대상국 분석

방글라데시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에티오피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방글라데시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이지혁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목 차

- I. 국가개황
 - 1. 일반개황
 - 2. 우리나라와의 관계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2. 대외거래
 - 3. 외채상환능력
- III. 경제구조 및 정책
 - 1. 구조적 취약성
 - 2. 성장잠재력
 - 3. 정책성과
- IV. 정치·사회안정
 - 1. 정치안정
 - 2. 사회안정
 - 3. 국제관계
- 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2. 국제시장평가
- VI. 종합의견

1. 국가개황

1. 일반개황

면적	148천 km ²	GDP	3,529억 달러
인구	1.6억 명(2021 ^f)	1인당 GDP	2,122달러(2021 ^f)
정치체제	의원내각제	통화단위	Taka
대외정책	비동맹중립	환율(달러당)	85.23(2020)

- 벵골만 연안에 위치한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면을 인도와 접하고 있으며 남동부의 일부 지역은 미얀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세계 8위(아시아 5위)의 인구 대국으로서 소득수준 향상 시 내수시장의 빠른 성장이 기대됨.
- 1947년 인도(힌두교)와 파키스탄(이슬람)이 영국에서 분리독립할 당시, 이슬람을 믿는 동벵골 지역(현 방글라데시)은 파키스탄의 일부인 동파키스탄으로 편성되었음. 이후 파키스탄 중앙정부의 차별정책에 반발한 동파키스탄이 지속적으로 독립을 요구한 끝에 1971년 아와미 연맹(Awami League)을 주축으로 한 독립군이 인도 정부의 지원으로 독립전쟁에 승리하면서 방글라데시를 건국하였음.
- 전체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봉제업 외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나,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정책에 힘입어 고도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2021년 최빈국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했고 2026년에 최빈국을 정식으로 졸업할 예정임.
-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총리의 3연임으로 정치는 안정적인 편이며, 실리주의 외교를 통해 중국과 인도 등 주변 강대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2.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73. 12. 18. 수교(북한과는 1973. 12. 16.)
- 주요협정: 무역경제협력협정('73년), 항공협정('79년), 문화협정('79년), 사증면제협정('83년), 이중과세방지협약('84년), 투자보장협정('88년), 경제기술협력협정('95년), 과학기술협력협정('95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협정('97년), 군수방위산업협력양해각서('04년), 무상원조협정('14년)

〈표 1〉 교역규모 단위: 천 달러

구 분	2018	2019	2020	주요 품목
수 출	1,238,299	1,282,342	1,033,331	석유제품, 철강판, 합성수지
수 입	346,507	404,703	392,918	의류, 신변잡화(신발·가방 등), 동제품

해외직접투자 현황(2021. 3월 말 누계, 총투자기준) 323건, 390,739천 달러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2〉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f
경제성장률	7.3	7.9	8.2	3.8	5.0
소비자물가상승률	5.4	5.8	5.5	5.6	5.8
재정수지/GDP	-3.3	-4.6	-5.4	-5.5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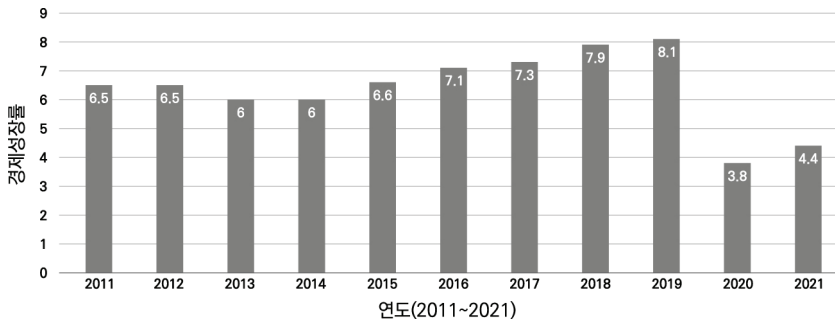
자료: IMF, EIU

□ 2021년부터 완만한 경기 회복이 예상되나, 코로나19의 재확산이 큰 변수로 작용

○ 방글라데시는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을 제외하고는, 2011년부터 연평균 6%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하고 있으며, UN이 지정한 최빈국 졸업을 위한 3가지 기준(1인당 국민소득, 인적자산 지수, 경제적 취약도)을 모두 충족하여 2026년 최빈국에서 중진국으로 진입할 예정임. 팬데믹 위기 상황에도 비슷한 경제 수준의 타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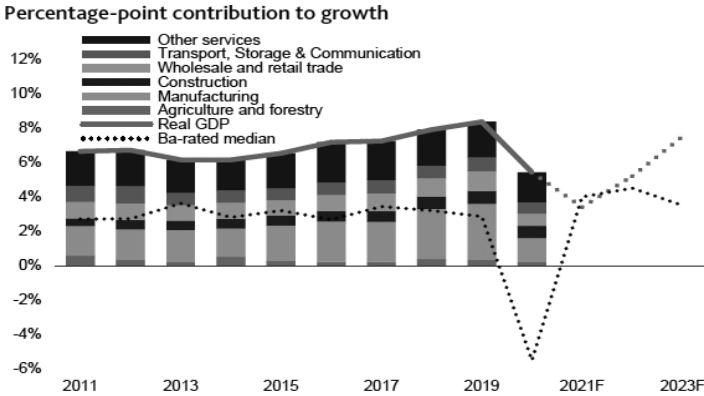
- 전체 수출의 80% 이상(GDP의 8.5%)을 차지하고 있는 의류 수출의 회복, 해외근로자 송금의 증가와 그에 따른 내수소비 진작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다만 2021년 6월부터 급격하게 퍼지고 있는 변이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2021/22회계연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달성 여부는 불투명함.

〈그림 1〉 방글라데시의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20

〈그림 2〉 경제성장률 추이와 산업별 기여도(%)



자료 :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Moody's Investors Service

□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 불투명

○ 전망기관에 따른 편차는 있으나, 방글라데시의 2021/22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은 평균 6.6%로 예상된다. 지난 2019/20회계연도의 경제성장률 3.8%(IMF 기준)는 40년래 가장 큰 폭의 성장률 하락이었으나, 이후 2020/21회계연도에는 5.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 회복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음. 아울러 주요 기관도 방글라데시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지만 이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3차 대유행이 일어나기 전에 나온 전망치로,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경기침체 가능성이 반영되지 못한 것임.

〈표 3〉 주요 기관별 방글라데시 경제성장률 전망(%)

회계연도/기관	ADB	IMF	WB	EIU	Fitch Solutions	방글라데시 정부
2020/21	6.8	5.0	3.6	5.2	5.5	5.2
2021/22	7.2	7.5	5.1	5.9	6.7	7.2

자료 : 각 기관 발표자료

- 인도와 인접한 방글라데시는 2021년 6월부터 변이 코로나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7월 중순부터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서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음.
- 경제성장은 주로 서비스 산업과 제조업에 의해 견인되고 있음. 특히 중국이 저부가가치 제조업의 생산량을 줄여감에 따라 방글라데시의 제조업이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음.

□ 상품수출은 완만한 회복세

- 방글라데시 수출진흥청(EPB)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하였음. 그러나 4월 한 달 동안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500% 증가하면서 2020/21회계연도 첫 10개월 동안의 상품수출 총액은 직전 회계연도 동기보다 8.74% 증가한 320억 달러를 기록하였음(의류 260억 달러).
- 총수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의류(RMG) 수출은 동 기간 6.24% 증가하였음. 의류도 3월과 4월의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부진을 만회할 수 있었음. 의류 수출은 주요 수입국인 유럽과

미국의 봉쇄조치 완화와 소비심리 회복에 따라 코로나19 발발 이전의 상태로 서서히 회복 중임.

- 동 기간 의류를 제외한 주요 수출품으로는 황마(30.88% 증가, 10억 달러), 농산물(9.1% 증가, 8억 달러), 수산물(4.17% 감소, 3억 달러), 의약품(12.22% 증가, 1억 달러), 가죽 및 관련 제품(8.56% 증가, 7억 달러)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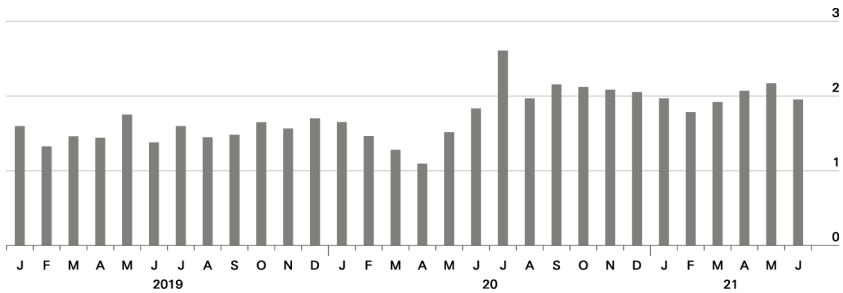
□ 기록적인 해외송금 유입으로 민간소비는 크게 위축되지 않을 전망

- 정부가 7월 1일부터 가장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함에 따라 2021/22회계연도 동안 빠른 경제 회복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민간소비는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 동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해외근로자 송금에 힘입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음.

- 2020년 해외송금 유입은 GDP의 6.6%(217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18.4% 증가한 것임. 코로나19 발발 초기인 2020년 초반에는 송금이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2020년 하반기는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고, 2021년 1~4월에는 42% 증가하였음.

- 글로벌 팬데믹 상황임에도 해외근로자 송금이 증가한 이유로는 정부의 해외송금 2% 현금 인센티브 정책¹⁾과 서류 요건 완화, 국경 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비공식적 채널의 송금이 줄어든 점, 해고 근로자의 귀국 전 송금, 방글라데시 근로자가 가장 많이 진출한 중동 국가들의 경기 회복 등을 꼽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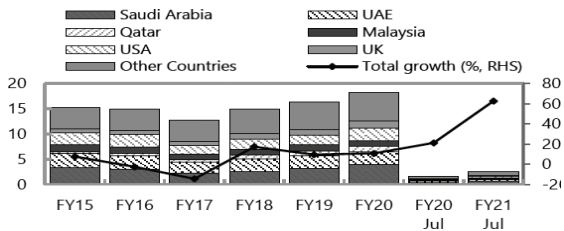
〈그림 3〉 해외송금 유입 변화(2019.01.~2021.06.)



자료 : Bangladesh Bank; Haver Analytics

주) 단위: 십억 달러

〈그림 4〉 해외근로자 국가별 송금(2019.01.~2021.07.)



자료 : Bangladesh Bank; EPB; IMF Staff Calcu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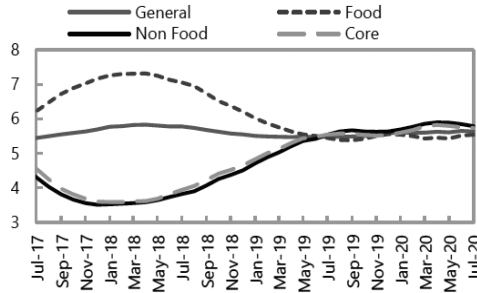
주) 단위: 십억 타카(BDT)

- 1) 방글라데시 국민이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할 때 정부가 송금액의 2%를 추가로 수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임. 이는 공식적인 채널로 송금하는 것을 격려하려는 정부 정책으로서 15만 타카 미만이면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 없으며, 15만 타카 이상의 현금을 송금할 시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운송비용 상승 등으로 5%대 유지 예상
 - 방글라데시 정부는 2021/22회계연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5.3% 수준에서 억제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EIU는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5.7%로 전망하고 있음. 강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이후 반복된 이동 제한으로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운송비용이 상승한 것을 반영한 것임.
 - 소비자물가는 2021년 5월 0.3% 하락했으나, 6월에는 1.3% 상승했는데, 이는 소비자물가지수의 60%를 차지하는 식품 가격의 상승에 힘입은 바가 큼. 5~6월에 마무리된 벼 수확의 풍년으로 쌀을 비롯한 주요 작물의 가격 상승폭이 높지 않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동안 상승한 운송비용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이 상쇄되었음.
 - 우기 동안 자주 발생하는 홍수로 인해 식량 가격이 급등할 수 있지만, 방글라데시의 기록적인 외화보유액을 감안할 때 부족한 부분을 적시에 수입으로 대체함으로써 추가적인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것임.
 - 연료 가격 규제와 의료 서비스 비용 안정을 위한 조치가 소비자물가의 극심한 변동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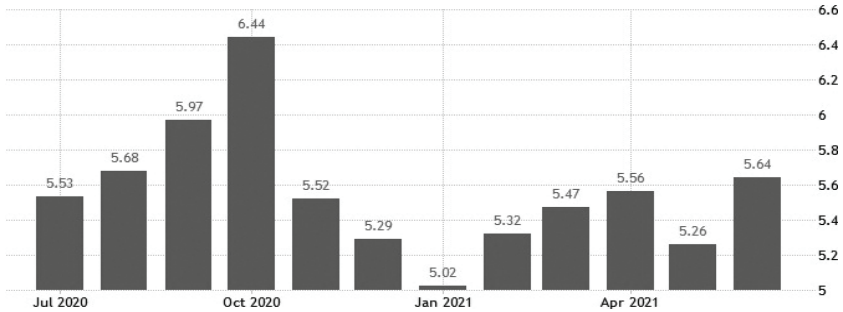
12개월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etc.

〈그림 6〉

최근 1년 간 소비자물가상승률 변동 추이(%)



자료 :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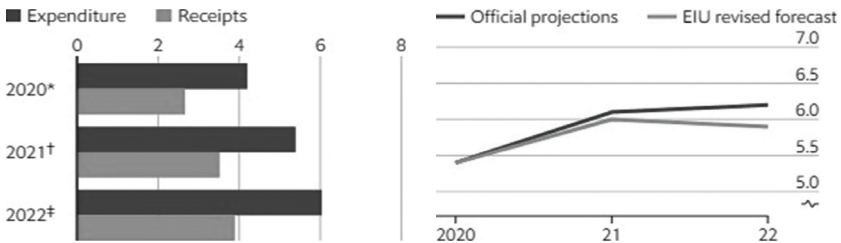
□ 기업 세금 감면 혜택과 코로나19 대응 지출로 재정수지 적자 확대 예상

- Mustafa Kamal 재무장관은 6월 초에 2021/22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2021/22회계연도 예산은 GDP의 17.4%인 6.04조 타카 (약 720억 달러)로 직전 회계연도 예산보다 6.34% 증액된 액수임. 본 예산안은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6.2%에 달하는 2.15조

타카로 책정하였는데, 이는 직전 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GDP의 6.0%)보다 0.2% 포인트 늘어난 것임.

- 방글라데시 정부는 2020/21회계연도 동안 기업에 대한 부분적 세금 감면 계획을 발표했다. 동 계획은 비상장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35% → 32.5%), 의류 가공업체에 대한 세금 감면 연장(2018년 7월부터 법인세율 15% 적용), 세금 감면 대상 기업 확대(핸드폰 조립, 쓰레기 처리, 전자제품) 등의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한편, 통신 및 디지털 기업을 주요 세수의 원천으로 간주하고 있음.
- 4월 셰이크 하시나 총리는 GDP의 2.5%에 달하는 7천 275억 타카를 경기부양책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함. 코로나19로 초래된 경기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3천억 타카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에 지원하고, 2천억 타카는 중소기업에 지원할 계획임. 방글라데시 정부는 앞서 의류 수출 산업 종사자 임금 지원에 500억 타카를 지출한 바 있음.

〈그림 7〉 2021/22회계연도 재정수지



자료: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EIU
주) 단위 조 타카, 2020(실제), 2021(수정 추정), 2022(예상)

자료: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EIU
주) GDP 대비 %

2. 대외거래

〈표 4〉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f
경 상 수 지	-5,985	-7,095	-2,949	1,082	-3,448
경상수지 / GDP	-2.4	-2.6	-1.0	0.3	-1.0
상 품 수 지	-12,966	-17,284	-15,929	-16,382	-21,534
상 품 수 출	35,301	38,682	38,747	32,468	34,643
상 품 수 입	48,267	55,966	54,676	48,850	56,177
외 환 보 유 액	31,289	29,973	30,648	41,036	44,818
총 외 채	54,737	60,356	70,340	77,016	80,079
총외채잔액/GDP	21.9	22.1	23.3	23.4	22.7
D,S,R.	6.0	4.7	5.5	6.2	10.0

자료: IMF, EIU

□ 수입 수요의 증가로 2025년까지 경상수지 적자 예상

- 상품수출과 상품수입이 모두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무역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는 추세임. 경상수지 적자는 2021년 GDP의 0.8%에서 2025년에는 GDP의 2.2%까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방글라데시는 저부가가치 의류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원자로(nuclear reactor), 인프라 사업을 위한 원자재, 그리고 자본재 및 민간소비 증가에 따른 소비재 수요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근로자 송금과 원조자금 유입분이 매년 증가하여 경상수지 적자 폭을 상당 부분 줄이고 있음.

- 중기적으로는 중국이 저부가가치 제조업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무역 재분배 효과가 방글라데시 수출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주요 무역 상대국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코로나19 상황이 일상화됨에 따라 상품수출이 점차 회복세를 보임. EIU는 2021년 상품수출이 전년 대비 15% 증가한 37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수출진흥청(EPB)이 잠정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상품수출은 전월 대비 15% 증가한 35억 달러로, 이는 전년 동월 대비 31.8% 증가한 것임. 유럽과 미국으로부터의 의류 수입 증가로 2021년 후반기에 상품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지만 강력한 봉쇄조치가 내려졌을 때도 수출과 관련된 공장은 중단없이 가동되었음. 다만, 봉쇄조치가 수출과 관련된 물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3. 외채상환능력

- 외채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외채구조는 비교적 안정적
- 2021/22회계연도 세입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외채 의존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방글라데시 정부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외채로 보전함에 따라 외채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정부는 양허성 차관과 무상원조를 포함한 외채가 직전 회계연도보다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이처럼 큰 폭의 증가에는 2020/21회계연도의 외채 비중이 이전 회계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는데 따른 기저효과도 원인으로 작용함. 외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대형 인프라 사업, 경기침체, 취약한 세수 기반, 코로나19 대응 자금 등을 꼽을 수 있음.
- 다만 총외채의 상당 부분이 양허성 차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채 구조는 안정적이며,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음.

III. 경제구조 및 정책

1. 구조적 취약성

□ 최빈국에게 주어지는 특혜에 대한 높은 의존도

- 방글라데시는 2018년과 2021년에 UN이 정한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y, LDC) 졸업을 위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이 끝나는 2026년 정식으로 최빈국에서 졸업할 예정임.

○ 중진국으로 진입하면 그동안 최빈국에게 주어졌던 무역 관련 특혜가 사라지므로, 정부 차원에서 남은 기간 특혜관세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는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모색과 민간기업 차원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됨.

- 방글라데시는 의류 수출의 62%와 전체 수출의 56%를 차지하는 유럽으로부터 ‘무기를 제외한 모든 상품(Everything But Arms, EBA)’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무역 특혜를 받고 있음. 유럽 이외에도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한국, 인도, 스위스, 러시아, 터키, 호주 등이 무역 특혜를 제공하고 있음.

- 방글라데시의 정책연구소인 ‘정책대화센터(Center for Policy Dialogue, CPD)’는 무관세무쿼터(Duty-free and Quota-free, DFQF) 자격 상실이 해마다 수출실적의 8~10%(약 25억 달러)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추정함.

- 방글라데시 정부는 최빈국 졸업 후 EU에서 제공하는 GSP Plus²⁾ 신청을 계획하고 있으나, GSP Plus 특혜를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함.

○ 방글라데시 정부는 무역 특혜 상실에 따른 손실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 운영비용 감축 및 주요 무역상대국과의 FTA 체결을 모색 중임.

2) EU는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1971년 선진국 가운데 처음으로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GSP)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GSP 이외에도 지속가능한개발 및 건전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위한 특별협정(GSP Plus)과 최빈국을 위한 특별협정(EBA)을 두고 있음.

□ 수출상품의 다변화 및 글로벌 가치사슬의 고도화 필요

○ 방글라데시는 지난 30년간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과 선진국의 무역특혜를 기반으로 의류산업을 핵심 수출산업으로 성장시켰으나, 동시에 이는 단일 산업과 상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낳는 결과를 초래했음. 의류제품이 전체 수출상품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수출시장도 EU 및 미국에 70% 이상 편중되어 외부 충격에 취약함.

- 총수출에서 의류 부문의 비중은 1990년 50%, 2010년 78%, 2020년 83%로 계속 증가했음.

○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던 2020년 상반기에 베트남이 방글라데시를 제치고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의류 수출국으로 등극했음. 이는 코로나19로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 주요 원인 이지만,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과 기술력을 고려할 때 방글라데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2020년 상반기 6개월 동안 베트남의 섬유와 의류 수출은 131억 8천만 달러였으며, 방글라데시의 의류(RMG) 수출은 119억 2천만 달러였음. WTO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방글라데시는 340억 달러 수출로 세계 시장 점유율이 6.8%였고, 베트남은 310억 달러 수출로 6.2%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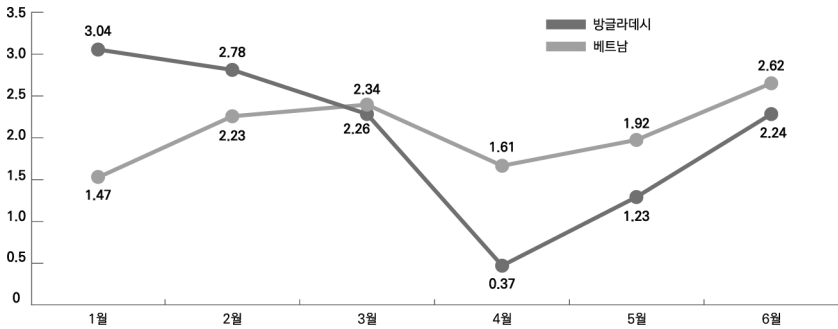
- 글로벌 바이어들의 베트남 선호, EU-베트남 FTA 발효(2020년 8월), 베트남의 상품 다각화 등은 향후 의류 수출 경쟁에서

방글라데시의 위치가 지속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방글라데시는 의류 상품의 다각화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단일 산업에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수출상품의 다변화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고도화가 절실히 필요한 단계임.

- 현재의 고도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시설 확충, 산업 전반에 필요한 인프라 개선, 물류 시스템 개선, 중소기업의 디지털화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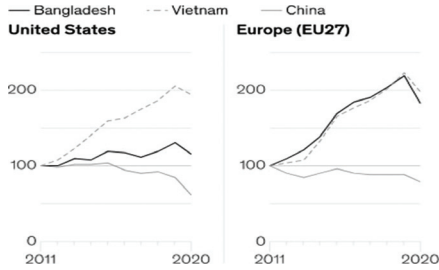
〈그림 8〉 방글라데시·베트남 의류 상품 수출 비교(2020년)



자료: EPB;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 Nam

주) 단위: 10억 달러

〈그림 9〉 방글라데시·베트남·중국 의류 수출 가치 비교



자료: Eurostat; USITC; McKinsey analysis

주) 인덱스(2011=100)

□ 취약한 세수기반 및 원조자금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로 재정적자 확대

○ 방글라데시는 2012년 이후 조세수입 목표액과 실제 세금 징수액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빠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세수기반, 비효율적인 세제, 낙후된 징세 시스템, 고질적인 납세 누락 등으로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이 9%를 넘지 못하고 있음.

- 2019/20회계연도 조세수입 목표는 3,400억 타카였으나, 실제 징수액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2,200억 타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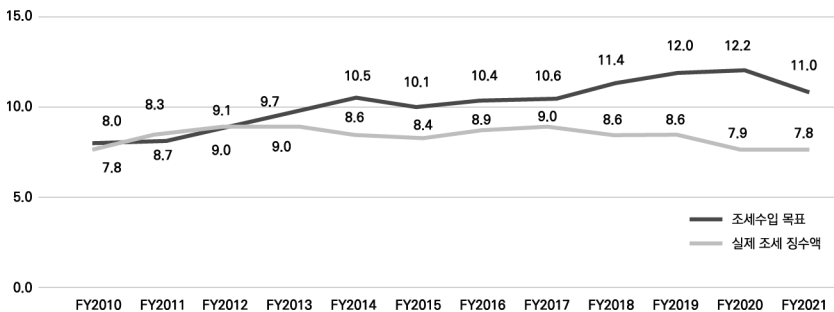
○ 방글라데시 정부는 매년 재정수입이 예산상 목표치를 하회함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재정지출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재정적자를 관리하는 한편,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제기구(WB, ADB) 및 일본 원조자금(JICA)과 중국 차관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이에 따라 외채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팬데믹에 취약한 보건의료 체계는 외채 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음.

- ADB는 올해 6월 방글라데시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구매를 위해 9.4억 달러,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5억 달러 차관을 승인하였음. 세계은행은 올해 1월에 방글라데시 농촌 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 복원력 강화를 위해 3억 달러 차관을 승인하였고, 6월에는 고등교육 가속 전환 사업(Higher Education Transformation Project)을 위해 1.9억 달러 지원을 승인하였음.

- 방글라데시 정부는 부족한 자원 확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민관협력사업청(Public Private Partnership Authority Bangladesh)을 설립하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과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음.

〈그림 10〉 조세수입 목표와 실제 조세 징수액 비교



자료: Ministry of Finance;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주) GDP 대비 %

□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대한 높은 취약성

- 낮은 고도, 높은 인구밀도, 열악한 인프라 시설, 농업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는 방글라데시를 기후변화에 예외적으로 취약하게 만드는 요소임. 매년 해수면 상승, 폭우, 사이클론, 가뭄, 침식, 산사태, 홍수, 염화 등으로 많은 주민이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고 있음. 글로벌 기후위험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방글라데시에서 인적·경제적 피해를 야기한 자연재해는 총 191건이며 총 손실규모는 16.9억 달러(PPP 기준)로 집계됨.
- 올해 5월 인도 동부와 방글라데시를 강타한 사이클론 야스(Yaas)는 방글라데시에서 15,000명의 수재민, 수천 채의 가옥 붕괴와 농지 및 양식장 파손을 초래했음.
-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해수면 상승이 경제에 실질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 방글라데시 국토의 2/3는 해발 5m 아래에 놓여 있으며 방글라데시 인구의 28%가 해안에 거주하고 있음.
 - 2050년까지 해수면 상승이 50c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약 11%를 잃게 될 것이며 저지대 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1,50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됨.

- 해수면 상승은 해안 지역의 식수를 오염시켜 임신 중 식욕부진증, 급성 호흡기 질환, 피부병 같은 건강 문제를 초래함. 염화는 토양 황폐화와 수확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방글라데시 경제의 버팀목인 농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2. 성장잠재력

□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과 거대 시장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

○ 방글라데시는 총인구 1.6억 명(2021년 말 전망치)을 보유한 세계 8위의 인구 대국이며 평균 연령이 28.6세(2020년 추정치)로 젊은 국가임.

- 젊고 숙련된 노동력이 풍부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신중산층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소비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음. 동시에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어 2030년까지 인구의 48%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인구 1, 2위의 중국과 인도, 인구 6.6억 명의 동남아를 연결하는 경제적 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음. 세계경제포럼(WEF)은 방글라데시가 2030년까지 세계 26위의 경제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의 개혁 의지

- 방글라데시 정부는 열악한 인프라 시설을 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인식하고 인프라 개선에 전폭적인 투자를 시행하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글로벌경쟁력보고서 2018/2019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전체 순위는 조사대상 141개국 중 105위를 기록했으며, 인프라 경쟁력은 114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함.
 - 매년 연간개발계획(ADP)을 통해 예산의 약 35%를 전력, 도로, 철도, 항만 등 국가 기반시설 확충에 투자하고 있음.

- 의류 산업의 성공을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기 위해 2010년 경제특구법을 발효하고 총리실 산하에 전담관청(Bangladesh Economic Zones Authority)을 설립하였음.
 - 2030년까지 총 100개의 국영 및 민간 경제특구 조성을 추진 중이며, 경제특구에 입주한 기업에는 법인세, 배당소득세, 자본소득세 면제(10년간 100%)와 원부자재 관세, 등록세, 인지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방글라데시 정부는 2015년 민관협력사업청(Public Private Partnership Authority Bangladesh)을 설립하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과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음.

- 2002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FDI는 정점이었던 2015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방글라데시는 2020년 기준 최빈국 중 캄보디아 다음으로 많은 FDI를 유치하였음(캄보디아 36억 달러, 방글라데시 26억 달러).

3. 정책성과

□ 중진국 진입과 빈곤을 감소를 목표로한 ‘방글라데시 비전 2021’

○ 2008년 총선에서 아와미 연합(Awami League)은 독립 50주년을 맞이하는 2021년까지 방글라데시가 나아갈 방향과 일련의 발전 전략을 포함한 장기계획으로 ‘방글라데시 비전 2021’(이하 ‘비전 2021’)을 제시했음.

- ‘비전 2021’은 2021년까지 중진국 진입과 빈곤을 감소를 목표로 제도적 토대 수립, 중진국 진입, 농촌 및 지방 개발, 산업 발전, 수출 제조업 육성, 무역 제도 개선, 지구화의 기회 활용, 외자 유치, 다자주의 무역, 지역 협력, 디지털 방글라데시 등의 목표를 설정하였음.

○ ‘비전 2021’은 지나친 기술적 낙관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셰이크 하시나 정권은 의류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방글라데시의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켰다는 평가를 받음.

- 정부의 꾸준한 경제개발 노력에 힘입어 코로나19 발발 이전까지 방글라데시는 10년 동안 7%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2015년 하위중소득국에 진입할 기준을 충족했으며, 2021년 최빈국 졸업을 위한 모든 과정을 이행하였음.

□ 중진국 진입 이후를 위한 장기 발전 계획, ‘비전 2041’

- 최빈국 졸업이라는 성공에 고무된 방글라데시 정부는 2020년 2월에 비전 2021의 후속 계획인 ‘비전 2041’과 이를 실천에 옮길 구체적 계획이 포함된 2021~41 전망계획(Perspective Plan of Bangladesh 2021~2041, 이하 ‘PP2041’)을 발표했다.
- ‘비전 2041’은 2031년까지 절대 빈곤을 퇴치하고 상위중소득국으로 진입하는 것과 2041년까지 빈곤을 퇴치하고 고소득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PP2041의 핵심 목표는 2041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12,500달러 달성, 완전한 디지털화, 빈곤 퇴치임.

〈표 5〉 경제성장 및 빈곤율 목표(PP2041)(%)

구분		벤치마크 FY20	목표 FY31	목표 FY41
실질 GDP 성장률		8.2	9.0	9.9
빈곤율	절대 빈곤	9.4	2.3	<1.0
	빈곤	18.8	7.0	<3.0

자료 : Perspective Plan of Bangladesh, 2021-2041

IV. 정치·사회안정

1. 정치안정

□ 현 여당의 장기 집권 예상

○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 아와미 연합(Awami League, 이하 'AL')이 2023년까지 집권할 것으로 전망되며, 자띠야(Jatiya)당이 공식적인 원내 야당이지만 이전처럼 행정부를 암묵적으로 지지할 것으로 예상됨. 비공식적인 군소정당 연합인 자띠야 오이카 프런트(Jatiya Oikya Front, OJF)가 실질적인 야당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국회 내 대표성 부족으로 여당의 정책 결정에 큰 위협이 되지 못함.

- 방글라데시에는 수십 개의 정당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AL'과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angladesh Nationalist Party, 이하 'BNP')이라는 두 개의 정당을 중심으로 정치지형이 형성됨.

○ 'AL'과 'BNP'의 라이벌 관계가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BNP'의 당 대표 칼레다 지아(Khaleeda Zia)의 구금이 그녀의 건강 악화로 인해 중단되고 있음. 칼레다 지아는 치료를 위해 해외 출국 허락을 요구하고 있지만 방글라데시 정부는 그녀의 출국을 금하고 있으며, 이는 'BNP' 주도의 반정부 시위가 일어날 소지가 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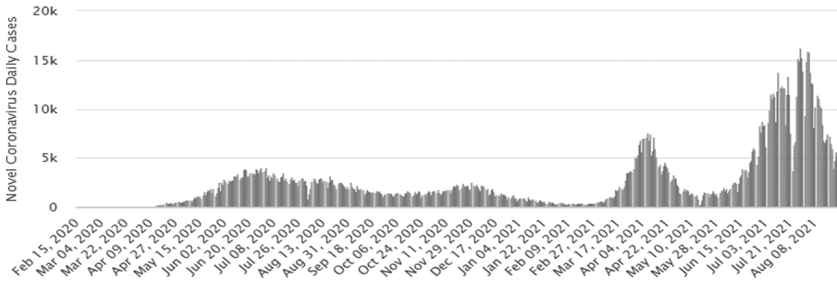
- 강력한 야당 세력의 부재로 2023년 후반기에 예정된 총선에서 ‘AL’의 네 번째 승리가 예상됨. ‘AL’과 권력을 양분하고 있었던 ‘BNP’는 2014년 총선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과도정부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AL’이 이를 무시하고 선거를 강행한 결과 ‘AL’은 대승했고 야당은 지리멸렬한 상태가 됨.

2. 사회안정

□ 변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급증

- 7월 이후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만 명이 넘어서면서 방글라데시 정부가 강력한 봉쇄조치를 시행했지만,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 상황임. 수도인 다카의 경우 6월 초에 3.5% 수준이었던 확진율이 7월 초에는 28.2%를 넘어서고 있음.
 - 전문가들은 감염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주민들의 낮은 의식 수준으로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퍼지는 것으로 분석함.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장 많았던 인도와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과 이슬람의 중요 명절인 희생제(Eid al-Adha) 기간(7월 14~23일) 봉쇄를 일시 해제하면서 발생했던 대규모 인구 이동도 급격한 확산의 주된 원인임.

〈그림 11〉 방글라데시의 일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 추이
(2020.02.15.~08.23.)



자료: Worldometer

- 백신 접종률은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4.1%에 불과함 (8월 25일 기준).
 - 방글라데시는 원래 인도로부터 백신을 공급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4월 인도의 코로나19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인도는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백신 수출을 중단했음. 이후 인도와 백신 외교 경쟁을 벌여온 중국이 6월 시노팜(Sinopharm) 백신 110만 회분을 무상으로 지원했음. 방글라데시는 7월에 시노팜으로부터 200만 회분을 구매했으며, 추가로 구매한 1,100만 회분이 3개월 내에 도착할 예정임. 미국도 두 차례(6월, 7월)에 걸쳐 모더나(Moderna) 백신 550만 회분을 무상 지원하였음.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저소득층의 불만이 증대되어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함.
 - 방글라데시의 보건 및 복지 체계가 미비하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은 2021년 후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경기부양책으로 약 14억 달러(GDP의 4.3%)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과 농업 분야 종사자들이 아닌 수출주도형 기업에 할당되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국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송환 우려 증대

- 2017년 8월 25일부터 미얀마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에 체류하고 있는 로힝야족 난민은 공식집계로는 약 91만 명(2019년 8월 기준), 비공식적 집계로는 약 110만 명으로 추정됨. 2년 내 송환 개시를 목표로 했던 셰이크 하시나 총리는 송환 지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
- 난민 체류가 장기화함에 따라 초창기에 현지 주민들이 보여주었던 무슬림이라는 동질감과 연민은 퇴색하고 난민들에 의해 초래되는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 구체적인 불만사항으로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으며 고용된 난민으로 인한 현지인 고용 감소, 인구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 난민 관련 범죄, 현지인과 난민 간의 마찰 등이 있음.
- 2월 1일에 발생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송환 문제는 더욱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음.

- 방글라데시 정부는 쿠데타가 발생한 당일 외교부를 통해 지금까지 로힝야족의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지속적인 송환을 위해 미얀마와 협력해 왔음을 강조하면서, 송환 절차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주도한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6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로힝야족의 라카인주 귀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음. 군부는 로힝야족을 미얀마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귀환에 대한 권리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한편,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에 저항하기 위해 구성된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는 로힝야족이 자신들과 함께 군사독재에 저항하는 혁명에 동참하도록 촉구했음.

□ Moody's는 방글라데시의 ESG 신용영향점수를 5등급(very highly negative)으로 평가

○ Moody's는 방글라데시의 환경 및 사회적 위험에 대한 높은 노출과 부패 통제, 법 집행 및 은행의 관리 감독 분야에서의 제도적 취약성을 반영하여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5등급(very highly negative)으로 평가하였음.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2021.1월 Moody's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8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5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20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65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낮은 해발고도와 갠지스강, 부라마푸트라강의 하구에 위치한 지리적 특징으로 홍수가 잦고, 낮은 소득과 열악한 인프라 시설은 기후와 관련된 재난으로 초래된 경제적 손실을 가중시킴. 몬순 기후로 인한 계절성 폭우는 농업에 큰 영향을 미쳐 농촌 소득과 소비의 불확실성을 초래함.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환경 영향은 E-5(very highly negative)로 평가됨.
- **(사회)** 지난 10년 동안 안정적이고 빠른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빈곤율이 개선되었지만, 열악한 물리적·사회적 인프라의 제약으로 여전히 경제발전이 더디고 소득수준이 낮음. 또한 낮은 수준의 교육 기회, 취약한 보건 및 사회안전망, 노동력 포용 문제 등을 반영하여 사회 영향을 S-5(very highly negative)로 평가함.
- **(지배구조)** 부정부패 통제와 법치의 어려움이 기존 제도를 약화시키는 점, 법 제도에 대한 낮은 신뢰성, 그리고 지배구조 문제에서 양산된 은행 자산의 질 문제 등을 고려하여 G-4(highly negative)로 평가함. 다만 상대적으로 강력한 통화정책과 재정에 대한 신중성은 거시경제 안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함.

3. 국제관계

□ 강대국 간 패권 경쟁에서 균형 있는 실리주의 외교 노선 추구

- 방글라데시는 주변 강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한쪽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 노선을 견지하고 있음. 방글라데시는 심화하는 미국-중국 무역 및 패권 갈등, 인도-중국 간 영토분쟁, 인프라 건설 선점과 무역 확대를 위한 주요 투자국 간의 경쟁을 최대한 자국의 실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방글라데시와 문화적, 역사적, 경제적으로 깊은 연관성이 있는 인도는 전통적 우방국으로서 방글라데시가 1971년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음. 그러나 최근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방글라데시와 중국 간의 경제적 밀착은 인도와의 외교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인도와의 외교관계는 정권을 잡은 정당에 따라 큰 온도 차이를 보이는데, 'AI'이 집권하는 동안에는 인도에 더 우호적이고 'BNP'가 집권하는 동안에는 인도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며 긴장 관계를 연출하기도 했음.
 - 올해 3월 27일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다카에서 방글라데시의 독립 50주년과 두 국가의 수교 50주년을 축하하는 정상회담을 갖고

5개 분야(연결성, 상업, 정보, 통신, 스포츠)에서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

○ 중국은 방글라데시의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무역상대국임. 방글라데시는 1위 교역 상대국인 중국으로부터 원자력 관련 기계, 의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전자제품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은 방글라데시의 군사 시설과 인프라 부문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특히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송유관, 항만시설, 저장탱크 등 기반시설 건설에 참여하고 있음.

- 2020년 6월 중국 정부는 방글라데시의 대 중국 수출 품목의 97%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음(2021년 1월 1일 발효). 방글라데시가 기존에 아시아-태평양 무역조약(Asia-Pacific Trade Agreement)에 의해 무관세 특혜를 받았던 품목은 3,095개였는데, 동 조치의 결과 8,256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음.

○ 미국 주도의 다자간 안보기구인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uad)³⁾에의 방글라데시 가입과 관련하여 미-중 간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음.

- 방글라데시 주재 중국대사는 올해 5월 외신기자협회 행사에서 “방글라데시는 쿼드에 가입해선 안 되며 만일 가입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4월

3) 쿼드는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 주요국들의 반중국 군사동맹 성격이 강함.

말에는 중국 국방부 장관이 방글라데시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역외대국의 동맹 규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 대변인은 “방글라데시의 주권, 스스로 외교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한다”고 밝혔고, 방글라데시 외교부 장관은 “쿼드에 초대된 적도 없지만, 가입 하든 말든 우리에게 달린 문제”라며 “우리는 우리 외교 정책을 따를 것”이라고 중국에 불쾌감을 표출했음.

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OECD 회원국 ECA 금융지원액의 연체율은 미미하고, 채무재조정 경험 없음
 - 2020년 3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 지원잔액 39.1억 달러 (단기 6.9억 달러, 중장기 32.1억 달러) 중 중장기 지원잔액 14.9백만 달러를 연체 중이며, 연체비율은 0.38%로 미미한 수준임.
 - 방글라데시는 2007년 이전까지 일본을 포함한 원조국의 외채 탕감을 받은 사례(2003년~07년, 4.1억 달러 상당)가 있으나, 2007년 이후 파리기후협약을 통한 채무재조정 경험은 없음.

2. 국제시장평가

〈표 6〉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5등급 (2021.06.)	5등급 (2020.06.)
S&P	BB- (2020.08.)	BB- (2019.05.)
Moody's	Ba3 (2021.04.)	Ba3 (2020.03.)
Fitch	BB- (2020.11.)	BB- (2020.11.)

□ 코로나19 상황 중에도 OCED 및 국제신용평가사들은 기존과 동일한 등급 유지

○ OECD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셰이크 하시나 총리의 장기 집권에 따른 정치적 안정성,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2015년 6월 방글라데시의 신용등급을 6등급에서 5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2017년 이후 OECD CRAM(Country Risk Assessment Model) 점수가 높아지는(신용도 악화) 추세였지만, 2021년에는 소폭 낮아졌음.

* OCED CRAM 점수: 32.0%(2017) → 35.6%(2018) → 40.8%(2019) → 44.9%(2020) → 43.2%(2021)

○ Fitch(2020.11.11. 보고서)는 낮은 재정수입에 반하여 증가하고 있는 국가채무, 취약한 투자환경, 은행 구조를 부정적인 요소로

평가하였지만, 공공재정 구조의 지속적인 개선, 코로나19로 인한 외부충격에 대한 복원력, 외화보유액의 증가 등을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하였음.

○ Moody's(2021.04.27. 보고서)는 재정 유연성에 제약이 되는 취약한 재정수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제도적 취약성 등을 부정적인 요소로 평가하였지만, 견조한 성장 전망, 거시 경제 안정성, 높지 않은 부채 부담, 양허성 자금 조달 능력 등을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하였음.

○ S&P(2020.08.12. 보고서)는 방글라데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있지만, 외부충격에 대한 회복력이 있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극복할 것으로 전망함.

VI. 종합의견

□ 방글라데시 경제는 2020년 초에 발발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력 수출산업인 의류의 생산·수출이 타격을 받았지만, 2020년 3·4분기 부터 조금씩 회복하고 있음. 다만, 올해 7월부터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경제성장의 높은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음.

□ 2021/22회계연도 세입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외채 의존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방글라데시 정부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외채로 보전함에 따라 외채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총외채의 상당 부분이 양허성 차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채구조는 안정적이며,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음.

- 방글라데시는 주변 강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한쪽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 노선을 견지하고 있음. 특히 최근 심화하는 미국-중국 무역 및 패권 갈등, 인도-중국 간 영토 분쟁, 인프라 건설 선점과 무역 확대를 위한 주요 투자국 간의 경쟁을 최대한 자국의 실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에티오피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김경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목 차

- I. 국가개황
 - 1. 일반개황
 - 2. 우리나라와의 관계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2. 대외거래
 - 3. 외채상환능력
- III. 경제구조 및 정책
 - 1. 구조적 취약성
 - 2. 성장잠재력
 - 3. 정책성과
- IV. 정치·사회안정
 - 1. 정치안정
 - 2. 사회안정
 - 3. 국제관계
- 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2. 국제시장평가
- VI. 종합의견

1. 국가개황

1. 일반개황

면적	1,104천 km ²	GDP	939.66억 달러(2021 ^f)
인구	98.73백만 명(2021 ^f)	1인당 GDP	951.76달러(2021 ^f)
정치체제	연방제, 내각책임제	통화단위	Birr
대외정책	친서방 실리추구	환율(달러당)	43.39(2021)

- 아프리카 대륙 동북단에 위치한 에티오피아는 지부티·소말리아(동), 수단·남수단(서), 케냐(남), 에리트레아(북)와 국경을 접하고 한반도의 5배에 달하는 국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임(2021년 기준 약 1억 명).
- 에티오피아 경제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으로 지난 15년간 연평균 10% 수준의 성장을 시현하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음. 그러나 코로나 19와 장기화되는 내전으로 인하여 2021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20년 만에 최저치인 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두 차례 연기 후 올해 6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번영당(PP)이 의석 436석 중 410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두면서 아비 총리는 연임에 성공함.
- 올해 7월 정부는 티그라이 지역에서 반군(TPLF)과의 내전을 중단하는 일방적 휴전을 선언하였고 이에 대하여 반군은 조건부 수용 입장을 보였으나,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반군 격퇴를 선언하면서 내전 상황은 다시금 악화됨.

2.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63. 12. 23. 수교(북한과는 1975. 6. 5.)
- 주요협정: 문화협정(1998), 무역협정(2003),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2011), 무상원조협정(2011), 과학·기술협력협정(2012), 이중과세방지협약(2017), 항공협정(2017)

〈표 1〉 **교역규모** 단위: 천 달러

구 분	2018	2019	2020	주요 품목
수 출	104,921	92,323	111,239	석유화학제품, 합성수지, 건설광산기계
수 입	54,448	57,224	64,800	기호식품, 산식물, 곡실류, 의류

해외직접투자 현황(2021. 6월 말 누계, 총투자기준) 21건, 51,943천 달러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2〉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f
경제성장률	10.2	7.7	9.0	6.1	2.0
소비자물가상승률	10.7	13.8	15.8	20.4	13.1
재정수지/GDP	-3.2	-3.0	-2.5	-2.8	-3.3

자료: EIU

□ 2021년 경제성장률은 15년 만에 최저치인 2% 예상

○ 에티오피아는 지난 15년간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2020년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급증*, 예상보다 더딘 백신 공급, 장기화된 티그라이 사태와 주변 지역(아파르, 암하르)으로 까지 번진 내전 상황 등은 민간소비와 경제활동을 크게 위축시켰고, 그 결과 경제성장률은 2019년 9.0%에서 2020년 6.1%, 그리고 2021년에는 2.0%(전망치)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이동제한정책(국경 폐쇄, 지역간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 금지, 공공장소 모임 금지 등)은 서비스, 상거래, 교통, 건설, 관광 분야에서 경제활동을 크게 위축시킴.

* 올해 4월 에티오피아에서 코로나19 감염의 빠른 확산으로 현재(2021. 8.8.자 기준) 확진자 수는 동아프리카 국가 중 1위, 아프리카 전체에서는 5위인 상황

○ 2022년부터 빠른 경기회복이 예상되지만, 내전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과 이로 인한 투자 위축으로 경제성장률은 이전 수준인 연평균 10%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됨.

- 에티오피아-지부티 가스관, 전력망, 철도 및 도로 건설 등 자본 프로젝트의 재개와 코로나19의 점진적 완화로 인한 주력 산업인 관광업과 항공운송산업의 재성장은 국가의 고용과 소득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됨.

- 2020년부터 외국 기업에게도 국내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라이선스가 부여됨에 따라 금융 부문의 확대와 대출 성장이 예상되며, 이는 사업 투자의 증가를 이끌어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인건비*는 섬유, 의류, 가죽 등 경공업 분야의 경쟁우위 요인으로서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과 국가 전역에서 운영 중인 산업단지와 함께 2025년까지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의 제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에티오피아의 월평균 인건비는 69달러로 방글라데시(79달러), 케냐(175달러), 인도(180달러), 베트남(201달러)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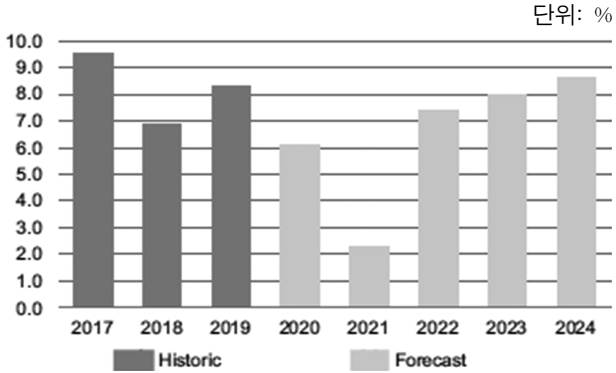
〈표 3〉 주요 기관별 에티오피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구분	IMF	WB	IHS Markit	Moody's	Fitch
2021년	2.0	4.0	2.3	2.0	3.1
2022년	8.7	4.6	7.4	8.7	6.9

자료: 각 기관 발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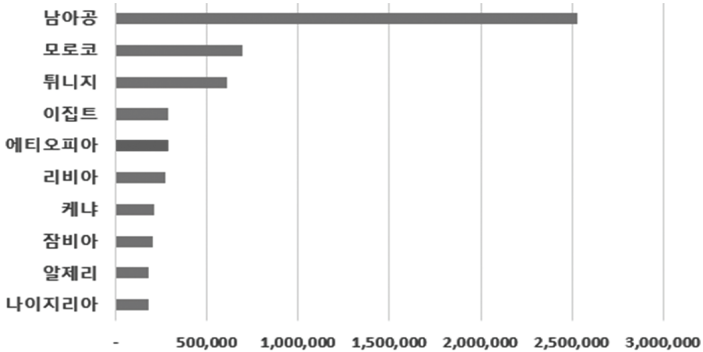
1) 자료: C. Stefano(2019). "Industrialization on a Knife's Edge: Productivity, Labor Costs and the Rise of Manufacturing in Ethiopia." World Bank., p. 6.

〈그림 1〉 에티오피아의 연도별 경제성장률망



출처: IMF

〈그림 2〉 아프리카 지역 코로나 확진자 수 상위 10개국('21.8.8.)



출처: statista

□ 서비스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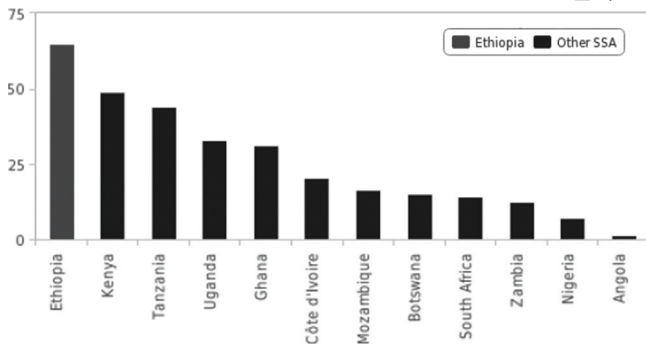
- 에티오피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서비스 부문이 총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로, 서비스 부문은 2019년 에티오피아 총수출의 65%를 차지함.

○ 아프리카 항공교통의 허브로서 에티오피아의 운송 및 관광 부문은 전체 서비스 수출에서 각각 78.1%, 15.5%를 차지했으며, 항공 운송은 전체 운송 중 99.2%를 차지함(2019년 기준).

-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의 범유행으로 인한 이동 제한과 임시적 국경 폐쇄, 내전 등으로 에티오피아를 방문한 외국인 수가 2020년 3월 기준 전년 대비 35.5% 감소하면서 서비스 수출액 역시 2019년 48억 4,226만 달러에서 2020년 44억 6,177만 달러로 감소함.

○ 아비 총리의 연임 성공으로 향후 정치적 안정과 투자지출의 회복이 예상되는 바, 이는 국내 수요의 증가를 이끌며 경제성장 및 상품 수입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한편, 정부의 경제 다각화 정책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완화 및 백신 접종률 증가로 인한 국제관광의 재개로 서비스 수출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상품 수입 증가에도 경상수지 적자 폭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3〉 기타 SSA 국가와의 총수출 중 서비스 비중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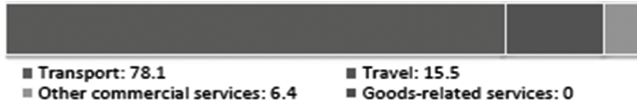


출처: Fitch Solution

〈그림 4〉

에티오피아 서비스 수출 구성

단위: %



출처: WTO

□ 세수 확보의 어려움과 재정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 지속

○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감소 및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2020년 세수는 16% 감소하였고, 티그라이 사태의 지속으로 인한 안보 비용의 증가와 선거 준비,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부문(2020/21회계년도 보건 부문 예산 46% 증가)과 경제 및 사회적 위기 대응 관련 지출 증가로 인하여 2020/21회계년도 재정적자 폭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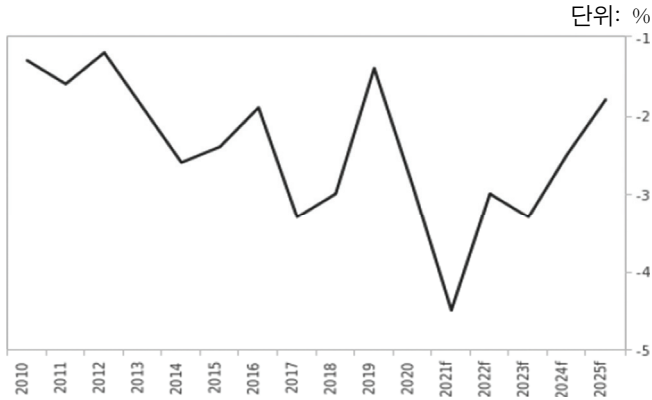
* Fitch: 2019/20회계년도 2.9% → 2020/21회계년도 4.5% /

EIU: 2019/20회계년도 4.7% → 2020/21회계년도 5.8%

- 선거 종료, 코로나19의 완화와 경제회복, 공공 인프라에 대한 정부투자의 점진적 감소, 에티오피아 텔레콤과 에티오피아 항공 등 주요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민간투자의 증가, 정부의 세수 기반 확대 정책 시행과 에티오피아-지부티 파이프라인을 통한 셰일가스의 수출 및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Grand Ethiopia Renaissance Dam: GERD)의 전력 생산은 정부 재정 수입의 증가와 재정 건전성 개선에 크게 기여하여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을 2021/22회계년도 3.0%에서 2024/25회계년도 1.8%까지 축소시킬 것으로 전망됨(Fi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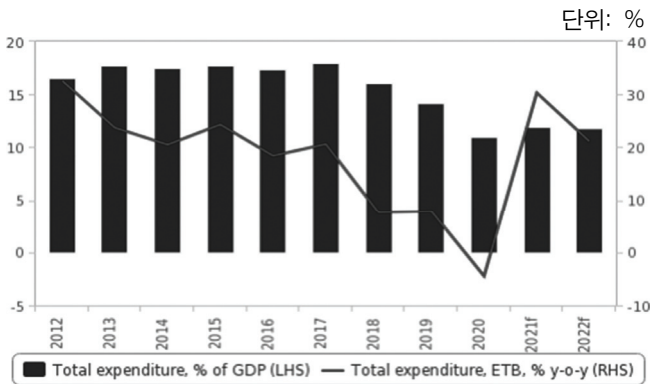
- 반면, GDP 대비 공적채무 비율*은 GERD 댐, 철도 및 발전소 건설 등의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과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외채의 지속적 증가로 당분간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 Fitch: (2019) 62.6%, (2020) 66.5%, (2021) 67.0%, (2022) 68.0% / EIU: (2019) 62.1%, (2020) 66.2%, (2021) 71.4%, (2022) 71.9%

〈그림 5〉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 추이 및 전망



출처: Fitch Solution

〈그림 6〉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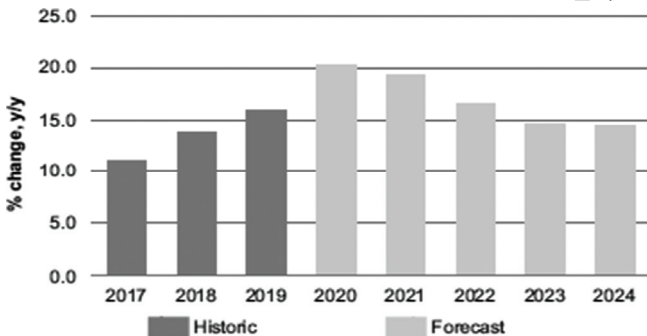
출처: Fitch Solution

□ 식료품 가격 인상으로 20%대의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 기록 중

○ 2020년 동아프리카 지역의 대규모 메뚜기 떼 습격, 장기화된 내전과 실항민 증가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급감, 비르(Birr)화 평가절하로 인한 수입품 가격의 인상 등으로 식료품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5월 19.7%에서 한 달 뒤인 6월에는 24.5%까지 상승하였으며, 2022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에티오피아의 소비자물가지수(CPI) 구성 비중은 식료품비(53%), 주거비(16%), 의복비(7%) 순으로 식료품 가격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큰 영향을 미침.
- 향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료품 국제가격 상승 폭의 축소, 코로나19와 종족 간 갈등의 완화로 인한 국내 식량 생산량 회복, 정부의 긴축재정 등에 힘입어 2025년 12.5%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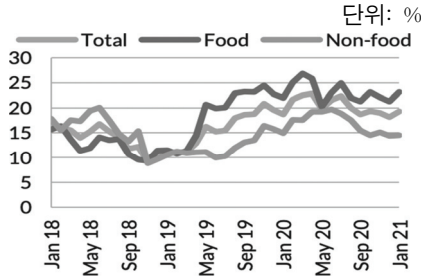
〈그림 7〉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출처: IHS Markit

〈그림 8〉

식료품과 비식료품 가격상승률 변화



출처: Fitch Ratings

2. 대외거래

〈표 4〉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f
경 상 수 지	-5,929	-4,611	-5,025	-2,719	-5,887
경 상 수 지 / GDP	-7.7	-5.8	-5.4	-2.8	-6.3
상 품 수 지	-11,206	-11,021	-10,310	-8,509	-9,998
상 품 수 출	3,030	2,705	2,746	3,253	4,197
상 품 수 입	14,236	13,726	13,056	11,762	14,195
외 환 보 유 액	3,022	3,958	2,965	3,022	3,160
총 외 채	24,670	26,812	29,131	30,849	31,817
총외채잔액/GDP	32.1	33.4	31.5	31.9	33.9
D,S,R.	23.3	21.5	29.2	24.0	22.6

자료: IMF, EIU

□ 코로나19와 내전, 원자재 수입 증가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심화

○ 에티오피아의 교역 조건은 정부의 자본재 수입억제 정책과 제조업 육성을 위한 노력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부가

가치가 낮은 상품(농산품, 화훼류, 의류·신발·가죽)을 수출하고,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자본재, 석유·가스 등을 수입하여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겪고 있음.

- 주요 수출품인 농산품(커피, 오일시드, 까트)은 부가가치가 낮을 뿐 아니라 농산물 국제가격 변동과 자연재해에 취약한 단점이 있으며, 주요 수입품인 자본재는 정부의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 추진으로 수입수요가 급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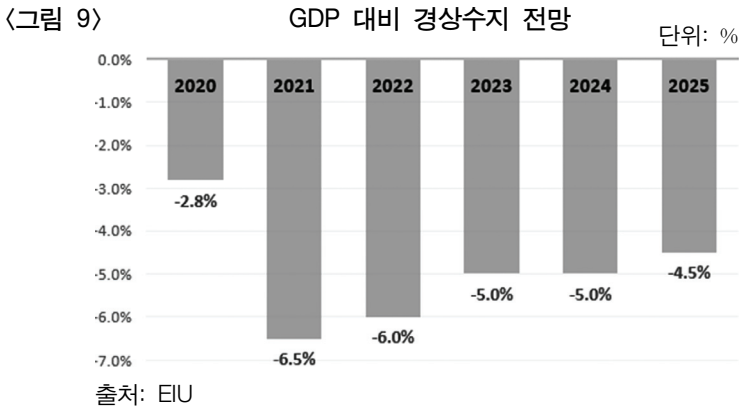
○ 에티오피아는 세계 3위 오일시드(유지작물) 생산 국가이며 티그라이 지역은 에티오피아에서 두 번째로 참깨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국내 참깨 생산량의 31%)이나, 내전과 정세 불안으로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에티오피아의 오일시드 수출은 감소하고 오히려 장기간 지속되는 내전으로 식량안보 위기가 증가하면서 농산물 수입이 증가함.

〈표 5〉 에티오피아의 주요 오일시드 생산량 단위: 톤

작물	2019/20	2020/21	변화량(2020/21)
참깨	280,000	255,000	-25,000
나이지 씨드(Niger seed)	295,000	300,000	5,000
대두	132,000	150,000	18,000
합계	707,000	705,000	-2,000

자료: USDA (원자료: FAS Addis Ababa)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 국경 이동 제한, 상품 운송 등의 차질로 에티오피아의 주요 외화 소득원인 항공운송 서비스(에티오피아항공)가 위축되고 주력 상품(화훼류 등)의 수출이 감소한 반면 수입은 증가하면서(2021년 약 21% 증가) 2021년 경상수지 적자 폭은 GDP의 -6%대 초반에 이를 전망이다.
-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인프라 프로젝트로 인한 원자재 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2025년까지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력 수출상품인 커피, 오일시드, 화훼 상품의 수출 증가와 관광 부문의 회복, 가스 및 전기 수출, 광물(금, 탄탈륨) 생산 증가 및 금속 원자재 국제가격의 상승에 따라 적자 폭은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3. 외채상환능력

□ 외환보유액 부족은 외채상환 부담 가중의 고질적 요인

○ 2021년 3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에티오피아의 외채 규모는 약 27억 1,070만 달러(단기 1억 6,890만 달러, 중장기 약 25억 4,180만 달러)이며, 연체액은 150만 달러로 연체비율(약 0.06%)은 높지 않은 수준임.

○ 그러나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와 외환 부족**을 겪는 가운데 재정수입 기반의 확대보다 대외차입을 통해 추진된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은 대외환경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초래하였음.

* 2020년 기준 1~3위 수출품은 모두 농산품(커피 26.9%, 오일시드 22.1%, 까트 9.3%)으로 전체 상품 수출액의 58.3%를 차지하는 등 비농업 부문의 수출기반은 매우 협소(EIU)

** 외환보유액(백만 달러):

(2018) 3,958, (2019) 2,965, (2020) 3,022, (2021e) 3,160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액(월):

(2018) 2.3, (2019) 1.8, (2020) 2.0, (2021e) 1.8

- 코로나19와 티그라이 사태로 인한 주요 외화 소득원인 농산물의 생산 및 수출 감소, 건설업, 제조업, 관광업 등 비농업 부문의 프로젝트 지연, 재외국민 송금 감소*, 외국인 투자 부진** 등으로 2020년 말 외환보유액(30.2억 달러)은 월평균 수입액의 2.0개월분으로 외화 부족수준이 심각한 상태임. 그러나 총외채에서 중장기

양허성 공적채무 비중이 높아 단기적 외채상환위험은 심각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평가됨.

* 비거주자 송금액(억 달러, EIU):

(2016) 7.7, (2017) 3.9, (2018) 4.4, (2019) 5.3, (2020e) 4.8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억 달러, UNCTAD):

(2015) 26.3, (2016) 41.4, (2017) 40.2, (2018) 33.1, (2020e) 25.2

- 외환 부족은 외채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건설 자재, 장비 등의 수입자금 결제 지연으로도 이어지면서 건설업, 제조업, 관광업 등 비농업 부문에서 프로젝트 지연과 외국인 투자 부진의 주된 요인이 됨.
- 향후 외환 부족 사태는 고질적인 무역수지 적자 구조와 정부의 인프라 사업 투자에 따른 자본재 수입으로 인하여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양자·다자 채무상환 유예 및 자금지원 확대

- 코로나19에 따른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최빈국들의 교역 위축, 세계 실물경기 침체 등으로 주 외화 소득원이 급감한 가운데 보건, 의료, 저소득층 지원 등에 필요한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여 외화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우려한 G20, IMF, 세계은행 등은 이 국가들의 채무상환을 일부 유예하고 긴급자금을 지원 중임.
- G20은 에티오피아를 포함한 최빈국들을 대상으로 2021년 말까지 채무상환 유예 이니셔티브(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

DSSI)를 통하여 채무상환의 한시적 유예 혜택을 제공 중임.

- IMF는 에티오피아에 대하여 2020년 4월 4억 1,000만 달러의 신속금융제도(Rapid Financing Instrument: RFI) 및 2020년 4월 (1,200만 달러)과 10월(633만 달러) 두 차례에 걸쳐 1,833만 달러의 재해억제 및 구호신탁(Catastrophe Containment and Relief Trust: CCRT)*을 승인함.

* IMF는 CCRT를 통하여 2020~2021년 중 총 28개국에 대하여 응급 의료 및 구호 활동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

- 세계은행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하여 IDA를 통해 8,260만 달러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 3월 전력 보급률 향상 프로젝트(5억 달러), 5월 디지털화 프로그램(2억 달러), 중소기업 지원(2억 달러) 등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였음.

○ 특히 중국으로부터 차입한 외채가 에티오피아 전체 외채의 50%를 차지하는 만큼(2018년 기준 120억 달러) 중국의 채무상환유예 혜택은 향후 에티오피아의 외채상환능력과 재정 여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에티오피아는 현재 중국에 채무 재조정을 요청한 상태임.

- 중국은 DSSI*, 중아프리카협력포럼(FOCAC), IMF의 재해억제 및 구호신탁(CCRT)을 통하여 채무면제 및 특별 채무유예 혜택을 제공함.

* 양자 공적신용기관인 중국 수출입은행과 중국국제개발협력기구(CIDCA)는 DSSI를 통하여 아프리카 16개국에 대하여 13억 달러 이상의 채무상환 유예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정보가 공개된 아프리카 국가는 잠비아(1억 1,000만 달러)와 케냐(3억 7,800만 달러)임.

III. 경제구조 및 정책

1. 구조적 취약성

□ 1차 산업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 에티오피아 경제는 농산물 수출과 관광업 등의 서비스업, 재외국민 송금 및 해외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상품수출 구성은 농산물 74.8%, 제조품 11.5%, 연료 및 광물 제품 0.5%, 기타 13.1%로 농산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상품수입 구성은 제조품 50.2%, 농산물 12.1%, 연료 및 광물 제품 10.8%, 기타 26.9%로 제조품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의 2019년 세계 제조업 경쟁력지수(CIP Index)에서 에티오피아는 152개국 중 145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으며, 제조업 구성 비중은 자원기반(55.7%), 하위기술(21.1%), 중간기술(15.0%), 고기술(8.2%) 순으로 자원기반 제조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에티오피아의 산업개발 수준이 여전히 1차 산업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여줌.

○ 농업 부문은 2017년 기준 GDP 대비 34.8%로 서비스업(43.6%)과 비교하여 비중은 크지 않지만, 고용의 약 66%(ILO)를 담당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함. 이로 인해 에티오피아 경제는 기상 조건, 농산물 국제가격 등 외부적 요인에 매우 취약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음.

- 주요 수출품인 커피(32.3%)와 오일시드(25.5%)는 2018년 전체 농산물 수출의 57.8%를 차지하였음.

□ 전력, 도로 등의 인프라 부족과 취약한 산업기반

○ 도로, 통신, 전력 등 기본 인프라의 부족으로 성장기반이 취약한 점은 외국인투자 유치와 국내 산업 육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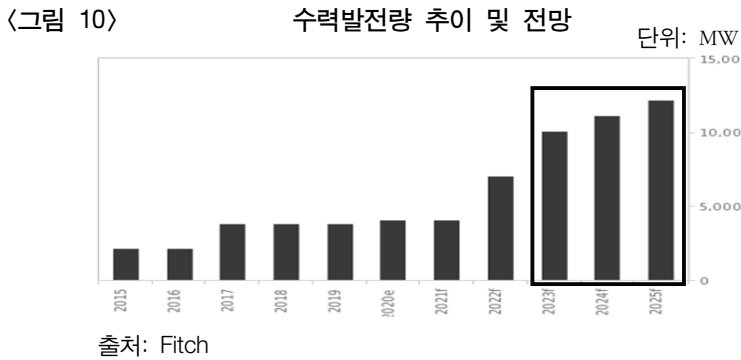
- 세계은행의 2021년도 기업경영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에티오피아는 전체 190개국 중 전력공급 부문 137위, 국제 무역 부문 156위(종합순위 159위)로 하위권을 기록하였으며, 2019년도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에서는 조사대상 141개국 중 인프라 부문 123위, ICT 채택 부문 137위, 기술 부문 137위(종합순위 126위)로 최하위권에 그쳤음.

2. 성장잠재력

□ 수력 및 기타 재생에너지 등 발전방식 다각화를 통한 전력난 해소 추진

- 에티오피아는 세계에서 전력보급률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로, 인구 10명 중 7명은 전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 이에 정부는 2011년부터 전력난 해소, 경제개발, 전력 수출국으로의 도약을 위하여 나일 강 분지 상류에 6,000MW급 발전용량의 아프리카 최대의 수력발전 댐인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 (GERD)을 건설 중(7월 기준 공정률 80%)이며, 2023년 완공 예정임.
- 40억 달러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에티오피아 역사상 최대 사업인 GERD 댐은 담수량이 740억 톤으로(한국 최대 소양강 댐의 담수량은 29억 톤) 완공 시 아프리카 최대,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수력발전소가 될 예정이며, 이곳에서 생산하는 전력은 현재 건설 중인 송전 선로를 통하여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전력난을 겪고 있는 동아프리카(탄자니아, 말라위, 우간다, 케냐) 및 주변국(지부티, 수단 등)에 수출될 예정임.
- 동시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현상의 심화에 따라 전력 생산에서 수력발전에 대한 높은 의존(전체 발전량의 90% 이상)을 탈피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가 전력화 프로그램(National Electrification

Program: NEP)을 통해 오프그리드(off-grid) 기술을 통한 전력공급 비율을 높이고자 하며(2025년까지 전력공급의 35%), 전력생산 방식의 다각화를 통해 개발가능량 대비 활용도가 낮은 풍력, 지열, 바이오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2) 코트라해외시장뉴스. “2021년 에티오피아 전력산업 정보.”(2021.9.3).

〈표 6〉 에티오피아의 에너지별 잠재적 개발가능량 및 활용량

에너지자원(단위)	잠재적 개발가능량	활용량	활용도(%)
수력(GW)	45	3.18	~17
태양광(day, KWh/m ²)	5.2	-	<1
풍력(GW m/s)	1,350	0.324	<1
지열(GW)	7	0.0073	<1
목재(백만 톤)	1,120	560	50
농업폐기물(백만 톤)	15~20	~6	30
바이오가스(가정)	100~300백만	17,869	<1

자료: Beyene, GE., et al. (2018). "Opportunities for Transition to Clean Household Energy in Ethiopia: Application of the Household Energy Assessment Rapid Tool." WHO., p. 7.

□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수출 확대 및 제조업 성장 기대

- 에티오피아 정부는 물류 시설의 최적화를 통한 제조업 육성 및 수출 지원과 외국인투자 유치 및 산업 다각화를 목적으로 산업 단지를 조성, 현재 총 13개의 산업단지*가 에티오피아-지부티 철도를 따라 운영 중임.

* 13개의 산업단지: 의복&직물 4개(Bahir-Dar, Hawassa, Kombolcha, Mekelle), ICT 1개(ICT Park), 의약품 1개(Kilinto), 기타 다분야 7개 (Adama, Addis Industry Village, Bole Lemi, Debre Birhan, Dire Dawa, Jimma, Semera)

- 정부가 추진한 인프라 주도 개발은 지난 15년간 연평균 10%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중추 역할을 하였으며, 그중 산업 단지 건설이 큰 부분을 차지함.

- 산업지대를 통한 수출액은 2020/21회계년도 첫 9개월 간 6억 1,000만 달러를 돌파하였고 약 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함.

- 산업단지 개발은 단기적으로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건설 분야의 성장,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고, 중기적으로는 의복, 가축 제품, 농산물 가공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함. 외국인투자의 증가는 잔존하는 사회적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2021~25년 에티오피아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2〉

산업단지 위치



출처: 에티오피아
산업단지개발공사
(IPDC)

3. 정책성과

□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한 자생적 경제개혁 계획 시행 중

- 에티오피아 정부는 2019년 12월 외환 부족, 높은 인플레이션과 외채부담, 민간부문의 자금 조달 능력의 한계 등을 극복하고 공적 채무의 지속적 관리 강화,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 감소, 경제·

투자·수출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2019년 9월부터 3년간 국내 경제개혁 프로그램인 자생적 경제개혁 계획(Homegrown Economic Reform Program)을 시행 중임.

- 동 계획은 ①거시경제(국제수지 불균형 해소, 인플레이션 관리) 및 금융부문(중개기관 역할 강화, 채무 지속성 보장) 개혁, ②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및 구조 개편, ③핵심 전략 분야의 개혁을 통한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 및 취약성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기업환경 개선 정책과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에티오피아 정부는 동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9년 12월 IMF의 확대금융(EFF)과 확대신용(ECF)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음.

* EFF·ECF는 3년 단위의 프로그램으로, 집행은 반기마다 집행 선결 조건 충족 여부를 고려하여 총 7회에 걸쳐 이루어짐. 첫 집행(2019년 12월 IMF 이사회의 프로그램 승인)을 제외한 모든 집행은 성과지표를 달성하고 이전 검토에서 요구된 항목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짐.

□ 2011~20년 동안 진행한 국가성장변화계획(GTP)에 이어 새로운 국가 발전계획을 시행 중

○ 정부는 2011~20년 동안 1, 2차에 걸쳐 진행된 국가성장변화계획 (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GTP)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보완 및 대체한 10년 단위의 새로운 국가발전계획(The Pathway to Prosperity, 2020/21~2029/30)을 발표함.

- 동 계획은 거시경제 불균형(높은 인플레이션, 증가하는 실업률과 채무 부담, 만성적 외환 부족, 열악한 기본 인프라 등)과 대외 충격(코로나19, 기후변화, 메뚜기 떼 습격 등)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개선하여 지속적 고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전략적으로는 ①양질의 성장, ②생산성·경쟁력 개선, ③제도적 변화, ④민간부문이 주도하는 경제, ⑤여성과 아동의 공평한 참여, ⑥기후 탄력적 녹색경제를 목표로 하며, 거시경제적으로는 2030년까지 제조업 포함 산업 부문의 GDP 기여도 확대*, 도시 실업률 9% 미만으로 감소(매년 136만 개의 새로운 직업 창출), 빈곤율 7%까지 감소, 1인당 소득 2,220달러 달성, 연평균 성장률 10.2% 달성 등을 목표로 함.
- 동 계획의 중점 분야는 ①생산적 분야(농업, 제조업, 광업), ②서비스 분야(관광), ③기반 분야(에너지, 교통, 금융, 혁신 및 기술, 도시 개발, 관개시설, 인적 자원 개발)로 구성됨.

* 부문별 GDP 기여도 확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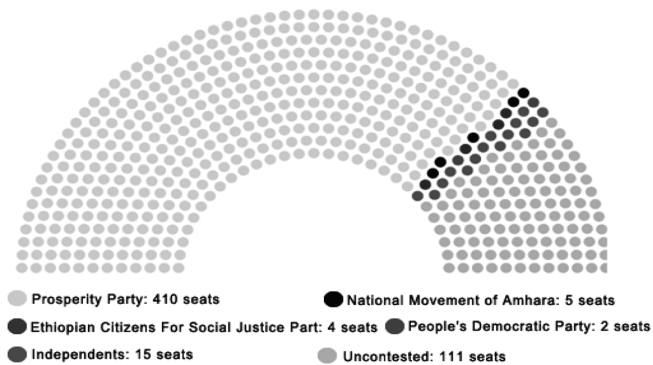
2018/19년(현재): 농업 32.8%, 광공업 27.6%, 제조업 6.8%, 서비스업 39.4%
 → 2030년(목표): 농업 22.0%, 광공업 35.9%, 제조업 17.2%, 서비스업 42.1%

IV. 정치·사회안정

1. 정치안정

- 올해 6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집권당인 번영당(PP)의 압승으로 아비 총리는 연임에 성공
 -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지난 6월 21일 치러진 총선에서 에티오피아의 여당인 번영당(Prosperity Party: PP)이 전체 436석 중 410석을 차지함에 따라 2018년부터 총리직을 맡은 아비 아머드(Abiy Ahmed Ali) 총리는 연임에 성공함.
 - 그러나 치안 불안, 종족 분쟁, 준비 부족 등으로 전체 선거구(547개)의 1/5이 넘는 64개 선거구에서 투표가 실시되지 못함에 따라 선거 결과의 정당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며 부정선거 의혹도 있음.

〈그림 13〉 정당별 의석 획득 현황



출처: Fitch

〈그림 14〉

티그라이(Tigray) 지역



출처: EIU

□ 정부는 티그라이 반군에 대한 일방적 휴전을 선언하였으나, 내전 상황은 점차 악화

○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은 총선 기간 공격을 강화하여 티그라이 주의 주도인 메켈레와 주요 도시를 장악하였고, 이에 정부는 인도적 목적과 농번기를 이유로 올해 6월 말 일방적 휴전을 선언하며 메켈레에 주둔하던 정부군과 에리트레아군을 철수함. 반군은 조건부 수용 입장을 보였으나 아비 총리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반군 격퇴를 선언하면서 휴전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고 이로 인해 티그라이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불안정과 민족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현재 분쟁은 티그라이 인근 암하라(Amhara)와 아파르(Afar) 지역 까지 확산되었으며, 반군은 암하라 주 유적 도시인 랄리벨라를 점령하였음. 이에 아비 총리는 티그라이 반군에 맞서 국민들의 참전을 촉구하였는데, 2019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총리의 이러한 행동은 티그라이 사태의 야기와 자국 내 학살 주도 관련 비판

에 더해져 노벨 평화상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을 불러일으킴.

- *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 암하라 민주당(ADP), 오로모 민주당(ODP), 남부 에티오피아 인민민주운동(SEPDM)의 4개 정당으로 구성되어 1991년부터 집권해온 에티오피아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은 2019년 11월 총선을 앞두고 아비 총리와 ODP 핵심 간부들의 주도로 EPRDF 내 3개 당(ODP, ADP, SEPDM)과 기타 5개의 정당으로 구성된 번영당(PP)을 창당하였으나, TPLF는 EPRDF에서 탈당하고 번영당에 합류하지 않으며 2020년 9월 독자적인 지방의회 선거를 진행함. 이에 아비 총리의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를 불법선거로 규정하였고 11월 TPLF가 에티오피아 북부 지역 정부군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TPLF를 향한 군사작전을 명령하면서 내전이 시작됨.

2. 사회안정

□ 티그라이 사태로 인한 북부 지역의 심각한 식량안보 상황

- UN의 통합 식량안보 단계 분류(IPC)에 따르면 올해 5~6월 기준 에티오피아 북부 지역(티그라이 지역과 인근 아파르, 암하라 지역) 주민 약 900만 명 중 61%(약 550만 명)는 심각한 식량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 중 35만 명 이상은 재난으로 간주되는 기근(5단계) 상태에 처해있는데, 이는 2011년 소말리아 기근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임.
- 티그라이 지역은 가장 심각한 식량위기 지역으로 전체 약 400만 명의 인구 중 48%는 식량 위기(3단계), 43%는 비상사태(4단계),

9%는 기근(5단계) 상태이며, 기근 상태인 인구 중 절반 이상은 어린이임.

- 이러한 식량안보 상황은 내전으로 인한 실항민 발생과 이로 인한 작물 수확 감소 및 생계 수단의 손실, 인도주의적 접근의 어려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내전이 진행 중인 에티오피아 북부 지역에서는 지난 10개월간 170만 명의 실항민이 발생하였고, 그중 165만 명이 티그라이 지역에서 발생함.
- 올해 9월에는 상황이 악화되어 에티오피아 북부 지역 인구 약 600만 명 중 74%(약 440만 명)가 식량위기 또는 더 심각한 상황을 마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중 약 42만 명은 5단계 수준인 재난 상태에 처할 것으로 예상됨.

□ Moody's는 에티오피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를 5등급(Very Highly Negative)으로 평가

○ Moody's는 에티오피아의 높은 부채와 낮은 부(wealth)의 수준이 사회적 회복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점과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에 크게 노출된 점을 감안하여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5등급(Very Highly Negative)으로 평가하였음.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2021년 1월 Moody's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8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5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20개국

(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65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국가 경제에서 농업의 높은 중요성과 주 에너지원인 수력 발전의 강우량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하여 가뭄이 반복될 경우 농업과 에너지 부문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환경 영향은 “부정적”(4등급)으로 평가됨.
- **(사회)** 높은 소득 불평등과 빈곤, 청년실업률이 사회적 불만을 가중시킬 소지가 다분함에 따라 사회 영향은 “매우 부정적”(5등급)으로 평가됨.
- **(지배구조)** 몇몇 공기업들에서 나타나는 취약한 거버넌스와 이로 인한 높은 부채 수준은 정부의 신용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아프리카의 뿔”(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잦은 정치·사회적 불안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 점을 미루어 “부정적”(4등급)으로 평가됨.

〈그림 15〉 에티오피아의 ESG 신용영향평가점수



출처: Moody's

〈그림 16〉 에티오피아의 ESG 요소별 점수



출처: Moody's

3. 국제관계

□ 티그라이 내전의 장기화로 인한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

○ 티그라이 내전 중 발생하는 인권유린 문제와 인도적 지원의 제한으로 인해 미국과 EU는 에티오피아 및 에리트레아를 대상으로 제재를 발표함.

- 미국은 지난 5월 23일 에티오피아 및 에리트레아를 대상으로 비자 발급 및 재정 지원 제한을 골자로 제재를 발표하였으며, 3개월 뒤인 8월 23일에는 내전 중 자행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에리트레아군(EDF) 참모총장인 Filipos Woldeyohannes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며 티그라이 지역에 주둔 중인 에리트레아군의 즉각 철수를 촉구함.
- EU 역시 지난 3월 22일 티그라이 지역에서 자행된 살인, 고문, 성폭행, 인신매매 등의 인권유린 행위와 관련하여 에리트레아를 대상으로 제재를 가하며 에리트레아 국가정보원을 블랙리스트에 등록함.

- 티그라이 인구 중 90%(약 520만 명)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에도 인도적 지원을 위한 외부의 접근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임.
 - 현재 필요 원조량의 약 10% 만이 티그라이 지역에 도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티그라이 반군이 국제 구호품 창고를 습격한 사건이 발생함.
 - 미국과 EU는 티그라이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완전한 허용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EU는 에티오피아에 대한 880만 유로의 개발자금 지원을 중단한 바 있음.

□ 청나일 유역 수력발전소 건설로 이집트·수단 등 주변국과 갈등 지속

- 2011년부터 건설 중인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GERD)은 주변국과의 협의 없이 에티오피아의 독단적인 건설로 인하여 이집트, 수단 등 강 하류에 위치한 주변국들과 나일 강 수자원 활용 및 주권 침해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이집트는 물 수요의 90%를 나일 강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자국민의 수원 공급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담수 개시 및 댐 가동에 강력히 반대해옴.
 - 작년 2월 미국 등의 중재로 에티오피아·이집트·수단의 3자 회담이 추진되었으나, 에티오피아 정부가 미국이 이집트 편을 든다고 주장하며 동 회담에 불참을 선언하여 협상이 결렬되었음.
 - 올해 1월 아프리카연합(AU)의 중재로 협상이 재개되었으나,

에티오피아가 3국 회담 합의와 관계없이 2차 담수를 진행할 것임을 통보하면서 담수와 운영 시기 등과 관련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협상은 또다시 결렬됨.

- 에티오피아는 지난 7월 2차 담수(135억 톤)를 마쳤는데, 2차 담수 시작 후 알-다임 댐에서 매일 수위 측정치를 조사한 결과 에티오피아 고원지대에서 블루 나일 강 하류인 수단으로 유입 되는 물의 양은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파리클럽으로부터 1992년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채무 리스케줄링 및 공적채무 탕감 수혜

- 에티오피아는 파리클럽으로부터 6차례(1992~2020년)에 걸쳐 리스케줄링 및 외채탕감을 받아 현재 상환 중임. 한편, 2020년 말 기준 에티오피아의 파리클럽 회원국 및 관련 기관 앞 채무액은 ODA 채무액 7억 1,000만 달러, 그 외 채무액 2억 1,800만 달러로 총 9억 2,800만 달러임.

□ G20으로부터 채무 리스케줄링 수혜

- G20은 2020년 4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국의

급박한 유동성 수요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채무상환 유예 이니셔티브 (DSSI)*를 발족하여 모든 공적 양자대출을 대상으로 원리금 상환 기간을 2020년 12월 말까지 연장했으며, 최근 해당 기간을 2021년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함. 이에 따라 DSSI 수혜국인 에티오피아는 단기상환 부담이 완화되면서 재정여력 확보가 가능해짐.

* G20의 채무유예 대상국은 최빈국(73개)으로 2020년 5월 1일부터 총 46개국, 약 57억 달러(한화 약 6조 3,300억 원) 부채에 대하여 혜택을 제공함.

〈표 7〉 파리클럽의 에티오피아 채무재조정 내역

채무 재조정일	채무재조정 대상액 및 조건	채권국	상환 여부
2020. 6.9.	[대상금액: 20,4.30자 기준 연체금 + 2020.5.1.~2021.6.30. 상환 원리금]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상환 중
2004. 5.13.	[총 14.87억 달러] ■ 탕감: 12.96억 달러(HIPC Initiative 졸업에 의거) ■ 리스케줄링: 1.91억 달러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러시아, 스웨덴, 영국, 미국	상환 중
2002. 4.18.	[총 800만 달러] ■ 800만 달러 전체 탕감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스웨덴, 영국, 미국	상환 중
2001. 4.5.	[총 4.32억 달러(탕감 1.3억 달러, 리스케줄링 3.02억 달러)] ■ non-ODA: 탕감(48.6%)+ 리스케줄링[23년(거치6년)] ■ ODA: 리스케줄링 [40년(거치 16년)]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스웨덴, 영국, 미국	상환 중

1997. 1.24.	[총 1.83억 달러] ■ non-ODA: 탕감(67%)+ 리스케줄링[23년(거치6년)] ■ ODA: 리스케줄링 [40년(거치 16년)]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 미국	상환 중
1992. 12.16.	[총 4.41억 달러] ■ non-ODA: 탕감(50%)+ 리스케줄링[23년(거치6년)] ■ ODA: 리스케줄링 [30년(거치 12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미국	상환 중

자료: 파리클럽

□ IMF·세계은행의 HIPC 및 MDRI를 통한 외채탕감 수혜

- 에티오피아는 IMF와 세계은행의 고채무반국 이니셔티브(HIPC) 및 다자채무구제 프로그램(MDRI)을 통하여 IMF·WB, AfDB로부터 2018년 8월 말 기준 각각 32억 8,000만 달러 및 31억 4,000만 달러의 외채를 탕감받았음.

2. 국제시장평가

〈표 8〉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7등급 (2021.06.)	7등급 (2020.06.)
Moody's	Caa1 (2021.05.)	B2 (2021.03.)
Fitch	CCC (2021.02.)	B (2020.06.)

□ 국제신용평가 3사는 2021년 에티오피아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강등

○ OECD는 에티오피아에 대하여 최하 등급인 7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2021.6월 평가).

○ Moody's와 Fitch는 에티오피아가 G20의 DSSI를 통하여 올해 말까지 채무상환 유예 혜택을 받은 데 이어, DSSI 종료 후 채무 재조정을 통한 저소득국 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원칙(Common Framework: CF)의 참여 의사*를 밝혀 채무불이행 위험을 높이며 민간부문 채권자들의 손실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킴에 따라 에티오피아에 대한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강등함.

* 에티오피아 정부는 올해 1월 에티오피아가 직면한 부채구조의 취약성을 경감하고 현재 IMF가 위험 수준으로 평가한 외채부담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기 위하여 G20 기본원칙을 통한 국가채무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음을 발표함.

- Moody's는 지난해 5월 메뚜기 떼 습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에티오피아 경제가 전방위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을 고려하여 금년 3월 신용등급을 B1에서 B2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금년 5월 Caa1으로 재차 하향 조정 하였음.

VI. 종합의견

- 에티오피아 경제는 국가성장변화계획(GTP)의 시행에 따른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으로 지난 15년간 연평균 약 10%의 고성장을 지속해왔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관광 및 항공 운송 부문의 침체와 수출 정체, 티그라이 내전의 장기화로 인한 민간 소비 및 경제활동의 위축 등으로 2021년 성장률은 2%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향후 산업단지 개발 및 자본 프로젝트 재개, 국영 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민간투자의 증가와 가스 및 전력 생산에 힘입어 성장률은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아비 총리의 연임 성공으로 당분간 정치적 안정은 예상되지만, 현재 주변 지역으로까지 번진 장기화된 내전과 이로 인한 심각한 식량 안보 상황 및 서방 국가와의 관계 악화, 그리고 댐 건설로 인한 이집트 및 수단과의 갈등 등의 문제가 남아있음.

- 최근 G20이 DSSI를 통해 공적 대출을 대상으로 한 채무상환유예 기간을 올 연말까지 추가 연장함에 따라 정부의 단기 재정 여력 확보가 가능해짐. 그러나 코로나19와 내전,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로 인하여 20%대의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만성적 쌍둥이 적자, 외환보유액 부족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Moody's와 Fitch는 에티오피아의 G20 기본원칙(CF) 참여로 향후 민간부문 채권자들의 손실 발생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년 들어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강등하였음.

「한국의 개발협력」 원고 기고

□ 발간 목적

- 「한국의 개발협력」은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국제개발협력 동향을 소개함으로써 개발협력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의 시각을 공유함으로써 대외원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 제고와 더불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형 개발협력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원고 게재 절차

- 기고 → 접수 → 심사 → 게재

□ 원고 집필 요령

- 내용 및 작성 : 개발협력과 관련된 최근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에서 논의 되고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서술 형식으로 작성
- 형식 : 한글파일 사용 (13 포인트, 200자 원고지 기준)
- 분량 : 200자 원고지 100매 이내

□ 기고 및 접수

- 기고 및 접수는 E-mail 전송을 원칙으로 한다.

E-MAIL : donghee.yoo@koreaexim.go.kr, jyk@koreaexim.go.kr

Tel : 02-6255-5671

- 기고 원고는 「한국의 개발협력」의 발간 목적에 부합하며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없어야 한다.
- 기고 원고는 게재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 심사

- 심사는 한국의 개발협력 편집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 또한 필요에 따라 외부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단, 원고 기고자는 해당 호의 심사자에서 제외된다.

□ 게재

- 원고는 교정·교열을 거쳐 게재하며, 한국수출입은행 경험총괄부는 제반규정에 따라 교정 및 수정 등의 편집권한을 갖는다.

-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준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 원고 게재가 결정된 원고 제출자가 별쇄본을 요구할 경우 별도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 게재희망 원고 중 외부의 연구지원을 받은 원고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ttp://www.edcfkorea.go.kr>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